
[토론회]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는?

일시 | 2022년 7월 25일(월) 13시 30분

장소 | 청주시도시재생허브센터 대회의실

주최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주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정감시센터

프로그램

13:30 개회 및 인사말

13:33 사회 조한상 청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정감시센터 위원

13:35 발표(15분)

3고(고환율, 고유가, 고환율) 시대,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김영배 청주대 경제학과 교수, 충북참여연대 정책위원

13:50 토론(각 7분, 60분)

정호섭 청주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소상공인 분야

신의수 서원대학교 교수, (주)제이비컴 대표이사
/ 고용, 일자리 분야

양준석 행복디자인‘사람’ 대표 활동가 / 복지 분야

송진섭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장 / 서민금융지원 분야

박종혁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보건·의료·건강 분야

이상정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장
/ 광역 지방정부 대응을 중심으로

박완희 청주시의회 의원 / 기초 지방정부 대응을 중심으로

14:50 종합토론

15:10 폐회

목차

발 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시대,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 김영배	01
토론1	소상공인 분야를 중심으로 / 정효섭	54
토론2	고용 일자리 분야를 중심으로 / 신의수	56
토론3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 양준석	60
토론4	서민금융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 송진섭	64
토론5	보건 의료 건강 분야를 중심으로 / 박종혁	72
토론6	광역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 이상정	79
토론7	기초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 박완희	87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시대,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는?

일시 | 2022년 7월 25일(월) 13시 30분

장소 | 청주시도시재생허브센터 대회의실(2층)

주최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청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김 영 배 교수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



목 차

- ❖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
 - ❖ 충북 지역 민생경제 현황
 - ❖ 정부의 민생경제 안정 정책
 - ❖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

민생경제 현황

해외 물가 동향 (22년 5월 기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 등으로 40년 만에 최고수준

-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공급측 상방요인을 중심으로 주요국 물가상승률은 40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중
 - ①(美) 5월 8.6%['81년 이후 최고수준] ②(유로존) 5월 8.1%[통계작성 <'97년 > 이후 최고]
 - ③(英) 4월 9.0%['82년 이후 최고] ④(OECD) 4월 9.2%['88년 이후 최고]
- 특히 3월(8.5%)을 정점으로 인플레이션 하강(peak-out)이 예상되던 미국 물가는 유가상승 영향* 등으로 5월(8.6%) 고점을 갱신

두바이유(\$/B): ('22.1)83.5 (2)92.4 (3)110.9 (4)102.8 (5)108.4 (~6.16)115.4

→ 전세계적으로 공급궤 상승압력이 지속·심화되면서 엄중한 물가여건이 장기화될 우려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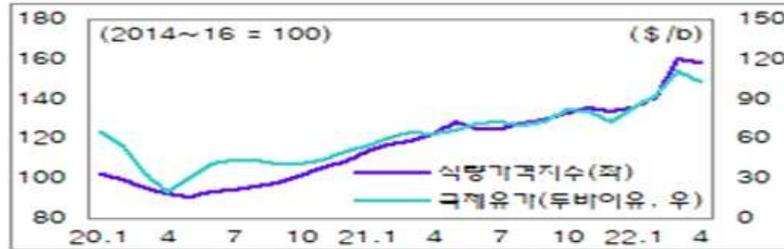
최근 유가와 농축수산물 등 공급측 물가상승압력이 심화되면서
소비자물가가 지속 상승하는 등 물가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

민생경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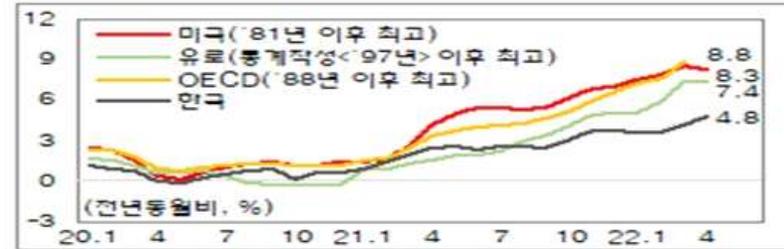
해외 물가 동향 (22년 4월 기준)

- 코로나 사태로 억눌렸던 수요도 빠르게 회복되면서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0~40년만에 최고 수준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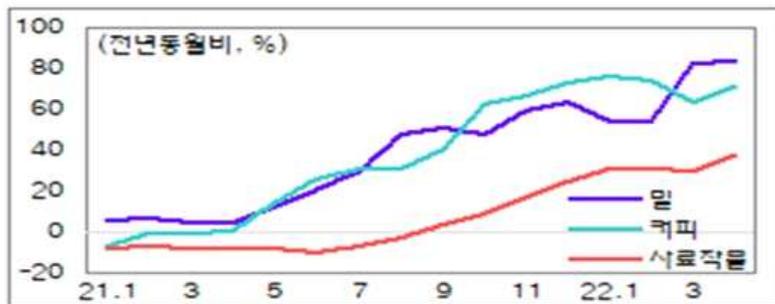
국제 유가·식량가격지수 추이



주요국 물가 상승률 추이



주요 곡물 수입물가지수 추이



국제 식량 가격 및 국내 가공식품 가격



출처 : 정부 관계부처합동 2022. 05. 30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민생경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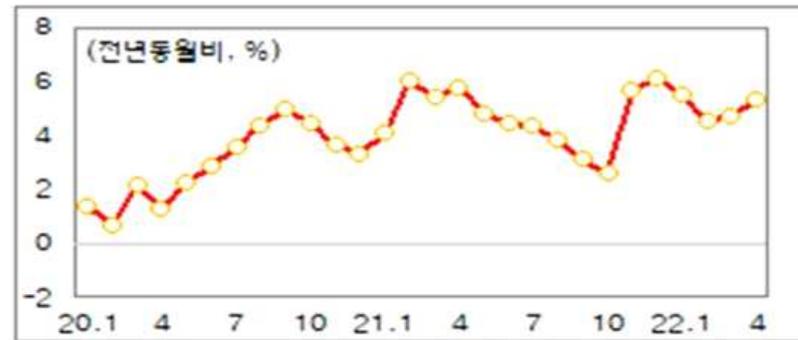
국내 물가 동향 (22년 4월 기준)

* 외식 물가(전년동기비, %) : ('21.3/4) 3.0 (4/4) 4.1 ('22.1) 5.5 (2) 6.2 (3) 6.6 (4) 6.6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품목별 기여도



생활물가지수 추이



'22.1/4분기 주요 생계비 지출 증가율 (% , 전체가구)

	소비지출	음식·숙박	차량연료	교육	주거	의료	통신	식료품
명목지출	4.7	13.9	17.5	13.5	10.0	7.5	3.5	0.9
실질지출	0.8	7.5	△3.5	12.3	7.8	7.1	3.4	△3.1

출처 : 정부 관계부처합동 2022. 05. 30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민생경제 현황

최근물가 동향 (22년 5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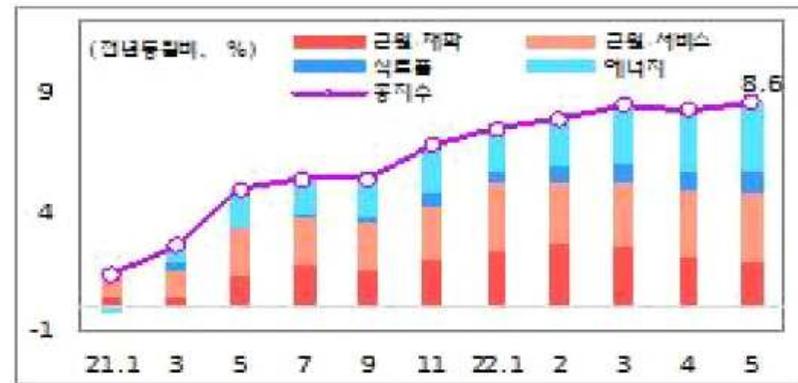
국내 물가도 대내외 공급측 상방압력이 가중되면서 5월 물가(5.4%)는 14년 만에 5%대 상승률을 기록

- 소비자물가(전년비, %): (21.10)3.2 (11)3.8 (12)3.7 (22.1)3.6 (2)3.7 (3)4.1 (4)4.8 (5)5.4
- 유가 및 곡물가 상승 영향에 따라 석유류와 식품물가가 지속 상승했으며 축산물 중심으로 농축수산물도 오름세 가시화*
- 주요 품목별 물가상승률(4월→5월, 전년동월비, %)
 - (석유류) 34.4→34.8 (가공식품) 7.2→7.6 (외식) 6.6→7.4 (농축수산물) 1.9→4.0

한국 소비자물가 추이



미국 소비자물가 추이



출처 : 정부 관계부처합동 2022. 06. 19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

민생경제 현황

최근물가 동향 (22년 6월 기준)



출처 : 통계청 2022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소비자물가지수 주요 등락률 추이

(%)

	연도별 동향(전년비)			최근 월별 동향(전년동월비)						
	2019	2020	2021	'22.3월	4월	5월	6월			
○ 소비자물가지수	0.4	0.5	2.5	4.1	4.8	5.4	6.0			
○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	0.9	0.7	1.8	3.3	3.6	4.1	4.4			
○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	0.7	0.4	1.4	2.9	3.1	3.4	3.9			
○ 생활물가지수	0.2	0.4	3.2	5.0	5.7	6.7	7.4			
○ 신선식품지수	-5.1	9.0	6.2	-2.2	1.0	2.5	5.4			
품목성질별	농축수산물			-1.7	6.7	8.7	0.4	1.9	4.2	4.8
	공업제품			-0.2	-0.2	2.3	6.9	7.8	8.3	9.3
	전기·가스·수도			1.5	-1.4	-2.1	2.9	6.8	9.6	9.6
	서비스			0.9	0.3	2.0	3.1	3.2	3.5	3.9

민생경제 현황

최근물가 동향 (22년 6월 기준)

< 주요부문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비 >

	(%)												
	'21.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2.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총지수	2.3	2.6	2.6	2.4	3.2	3.8	3.7	3.6	3.7	4.1	4.8	5.4	6.0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	1.5	1.8	1.9	2.0	2.8	2.4	2.7	3.0	3.2	3.3	3.6	4.1	4.4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	1.1	1.3	1.3	1.4	2.3	1.9	2.2	2.6	2.9	2.9	3.1	3.4	3.9
생활물가지수	3.0	3.5	3.3	3.1	4.6	5.2	4.6	4.1	4.1	5.0	5.7	6.7	7.4
신선식품지수	8.0	4.6	-0.9	-4.6	-7.8	5.6	6.7	6.0	-0.9	-2.2	1.0	2.5	5.4

< 소비자물가지수 등락을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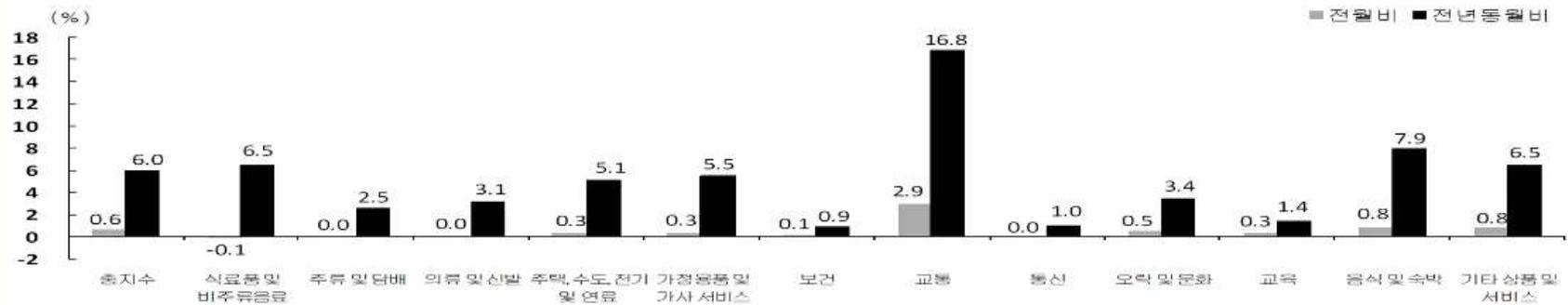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2022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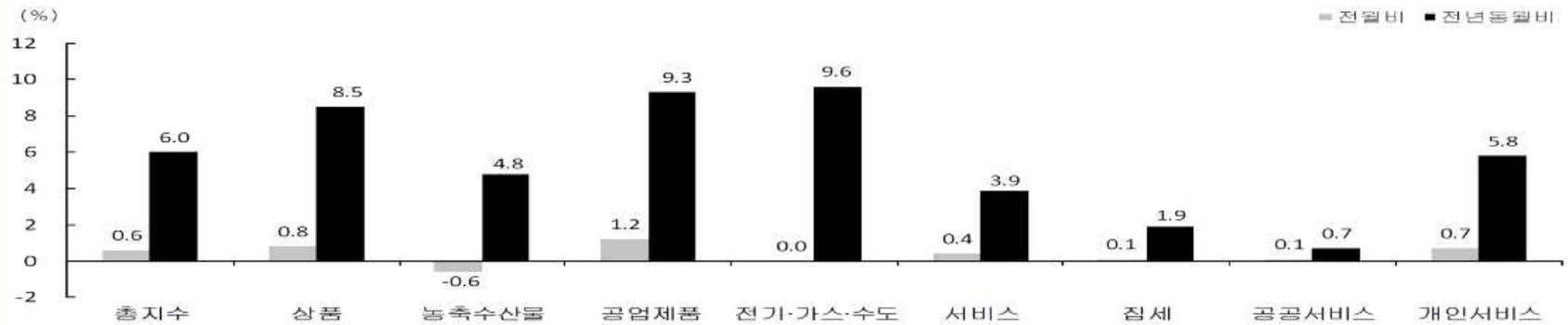
민생경제 현황

최근물가 동향 (22년 6월 기준)

< 지출목적별 등락률 >



< 품목성질별 등락률 >



출처 : 통계청 2022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민생경제 현황

최근물가 동향 (22년 6월 기준)

- 2022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2020=100)로 전월대비 0.6% 상승
-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6%, 전년동월대비 6.0% 각각 상승
- 전월비는 전기·가스·수도는 변동 없으며, 농축수산물만 하락하였으나, 공업제품, 서비스가 상승하여 전체 0.6% 상승
- 전년동월비는 공업제품, 서비스, 농축수산물, 전기·가스·수도가 모두 상승하여 전체 6.0% 상승
-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4.4% 각각 상승
-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3.9% 각각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8%, 전년동월대비 7.4% 각각 상승
- 전년동월대비 식품은 7.7%, 식품이외는 7.2% 각각 상승
-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1.0% 하락, 전년동월대비 5.4% 상승
- 전년동월대비 신선과실 6.5%, 신선채소 6.0%, 신선어개 2.7% 각각 상승

출처 : 통계청 2022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민생경제 현황

유가 동향 (22년 6월 기준)

국제 유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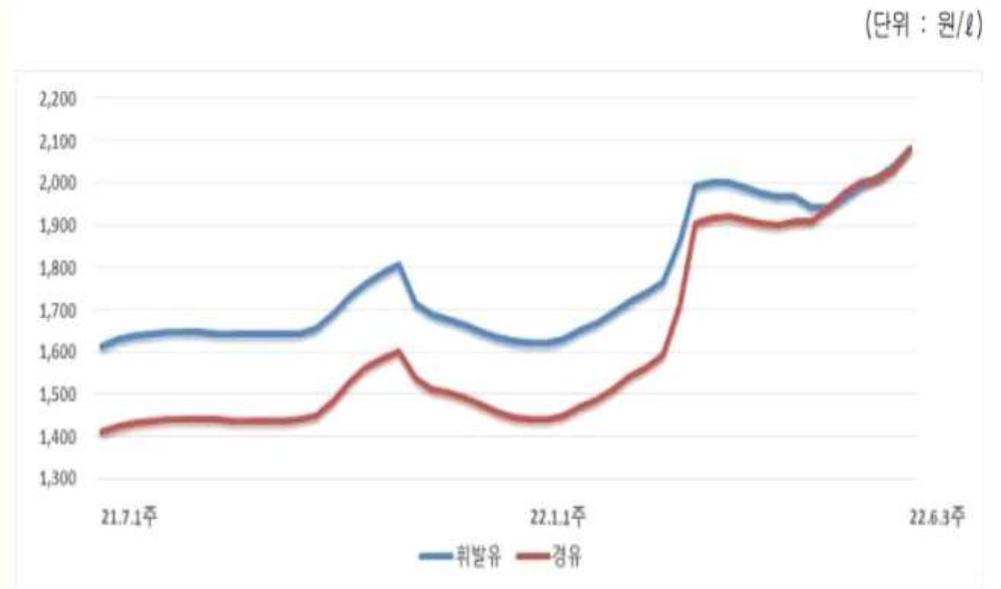
(단위 : 원/ℓ)

유종	유통 단계	'21년	'22.3월	'22.4월	6.1주	6.2주	6.3주 (6.13~6.16)	전주대비
두바이(\$/bbl)		69.3	101.2	102.8	112.8	117.1	116.4	↓ 0.7
보통 휘발유	국제(\$/bbl)	78.3	127.5	123.5	148.1	151.0	150.5	↓ 0.5
	정유사	1,498.5	1820.3	1,803.7	1,923.3	1,971.8	-	↑ 48.6
	주유소	1,590.5	1938.5	1,976.5	2,013.0	2,037.5	2,080.9	↑ 43.4
자동차용 경유	국제(\$/bbl)	77.5	141.8	148.8	166.4	176.6	180.6	↑ 4.0
	정유사	1,286.5	1742.0	1,807.5	1,888.5	1,984.9	-	↑ 96.5
	주유소	1,391.3	1826.9	1,906.4	2,008.4	2,030.8	2,082.7	↑ 51.9
환율(원/\$)		1,144.0	1121.0	1,232.3	1,248.1	1,252.8	1,283.4	↑ 30.6

* 국제휘발유는 옥탄가 92RON, 국제경유는 황함량 0.001% 기준

출처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

국내 유가 추이



출처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

출처 : 정부 기획재정부 경제e야기

민생경제 현황 기준금리 인상 (22년 7월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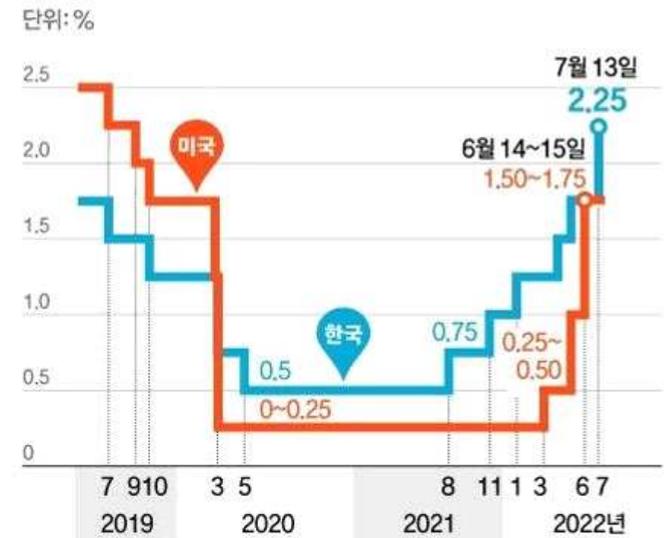
한은 사상 첫 '빅스텝', 금리 1.75→2.25%

-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2.25%로 0.5%포인트 인상
- 1999년 기준금리 도입 이래 첫 '빅스텝(0.5%포인트)' 인상이다. 사상 첫 3연속 인상 결정
-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국내 물가와 미국과의 금리 역전 우려 속 이뤄졌다.

빅스텝에도 Fed 자이언트스텝 밟으면 금리역전

- Fed는 지난달 14~15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0.75%포인트(자이언트 스텝) 인상했다. 현재 미국의 정책금리는 연 1.5~1.75%다.
- 문제는 Fed가 오는 7월 FOMC에서도 또 다시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 이렇게 되면 미국의 정책금리는 연 2.25~2.5%로 상승
- 한은의 이번 빅스텝에도 상단 기준으로 금리 역전이 발생

한-미 기준금리 추이



자료: 미국연방준비제도(Fed),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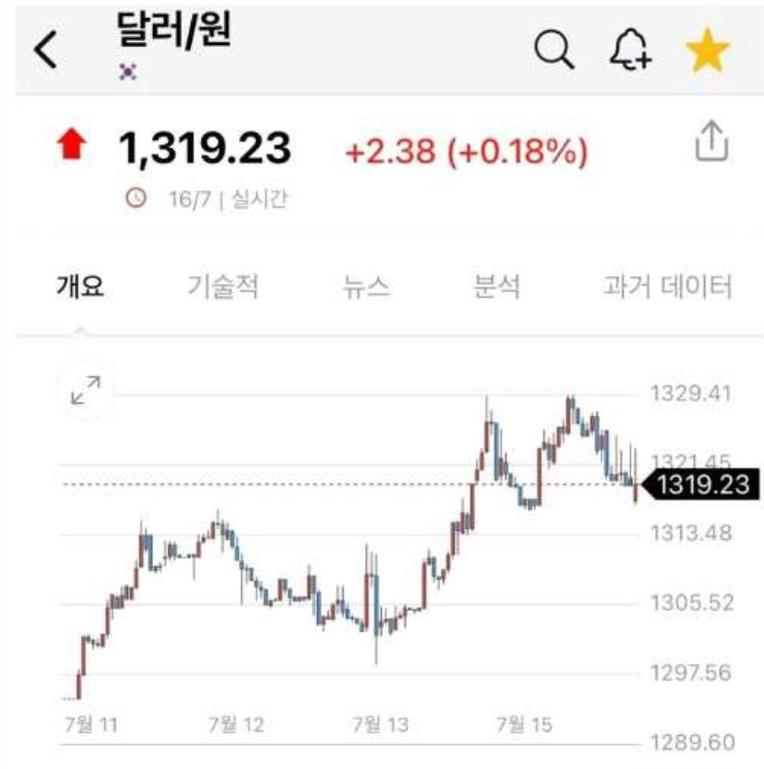
The JoongAng

출처: 중앙일보 2022.07.13 [한은 사상 첫 '빅스텝', 금리 1.75→2.25%...3연속 인상도 처음](#)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민생경제 현황 기준금리 인상 (22년 7월 13일)

7년 만에 기준금리 2%시대 열려

- 한은의 빅스텝 인상으로 2015년 이후 약 7년 만에 2%대 기준금리 시대 열림. 1%대의 초저금리 시대 종지부
- 물가와의 전쟁 속 금리를 끌어올리는 한은의 아픈 손가락은 가계부채.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 금리도 더 오를 수밖에 없어 가계와 기업 등의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
- 한은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859조4000억원
- 이 중 변동금리 비중은 약 77%에 달한다. 지난해 9월 가계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0.5%포인트 오를 때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각각 3조 2000억원, 6조4000억원 늘어날 전망
- 대출자 1인당 연이자 부담은 각각 약 16만1000원, 32만2000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



출처 : 중앙일보 2022.07.13 [한은 사상 첫 '빅스텝', 금리 1.75→2.25%...3연속 인상도 처음](#)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민생경제 현황 **국민고통지수** 역대 최고

- 올해 1분기(1~3월) 국민고통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
- 지난 7월 5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 -올해 1분기 국민고통지수는 10.6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
- **국민고통지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실업률을 더한 것**
- -미국 경제학자 오쿤(Arthur Okun)이 고안한 지수다.
- 올해 1분기 국민고통지수는 **분석기간 평균치 7.7의 1.38배 수준**
- 한경연이 확장실업률이 발표되기 시작한 2015년 1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의 분기별 국민고통지수를 산출한 결과다.
- 고통지수가 높다는 것은 물가가 큰 폭 상승했거나 실업자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해 그만큼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이 낮아졌다는 것

출처 : 뉴시스 2022.07.05 나는 물가, 뛰는 실업률... 국민고통지수 7년 내 최고

〈 분기별 국민고통지수 추이 〉



· 자료 : 한경연

* 주3) 한편, 확장실업률이 아닌 공식실업률을 사용할 경우에도 금년 1분기가 7.3으로 분석기간 중 국민고통지수가 정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민생경제 현황 국내 경제 동향

불확실성 확대, 물가 상승, 리스크 증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리스크 확대 및 물가 상승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곳곳에서는 한국 경제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이 발표됨에 따라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

경기 불황 속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2021년	2022년 ^e		2023년 ^e
		[수정]	[당초]	
■ 경제성장률(%)	4.1	2.6	3.1	2.5
■ 취업자증감(만명)	37	60	28	15
- 고용률(%, 15~64세)	66.5	68.0	66.9	68.4
■ 소비자물가(%)	2.5	4.7	2.2	3.0
■ 경상수지(억불)	883	450	800	560
- 수출(전년비, %)	25.7	11.0	2.0	1.0
- 수입(전년비, %)	31.5	18.0	2.5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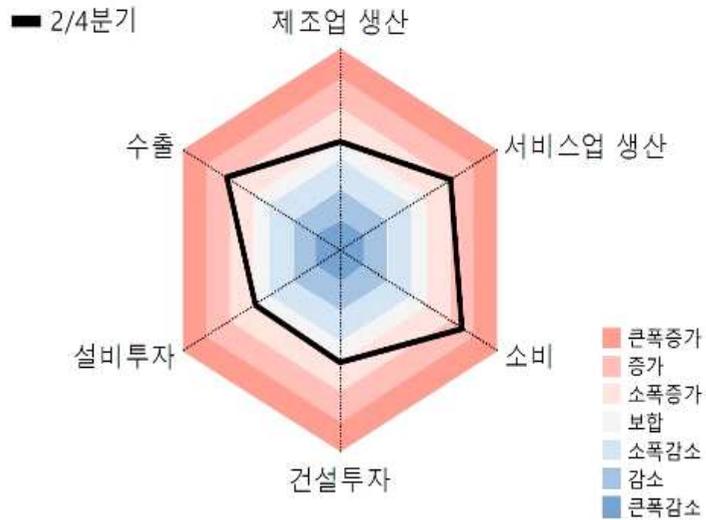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세,
방역해제에 따른 수요측 압력 증대 등으로 당분간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세 지속 전망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활·체감물가 상승세를 최대한 완화하고**
서민 생계비·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

출처 : 정부 기획재정부 경제e야기

충북 지역경제 현황 22년 2/4분기

- 충북 경기는 1/4분기 대비 소폭 개선
- 4~5월 중 취업자수는 전분기보다 증가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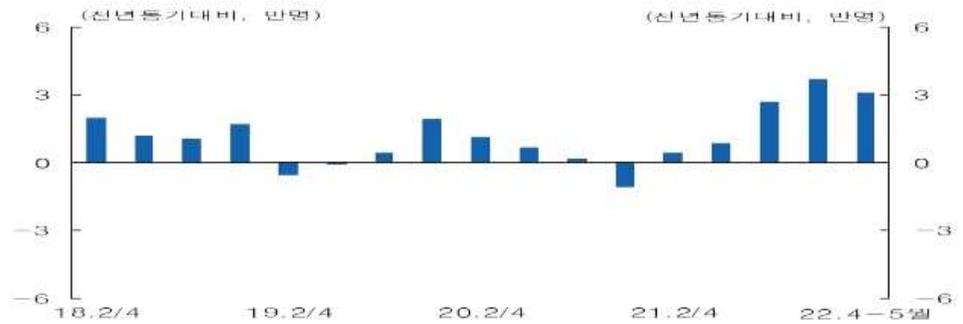
경기 레이다¹⁾



주 : 1)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1/4분기 대비(수출은 전년동기대비) 방향성을 지수화(-5~+5)하여 평가한 것임

출처 : 한국은행 충북본부 2022.6 충북지역경제보고서

취업자수 증가¹⁾



주 :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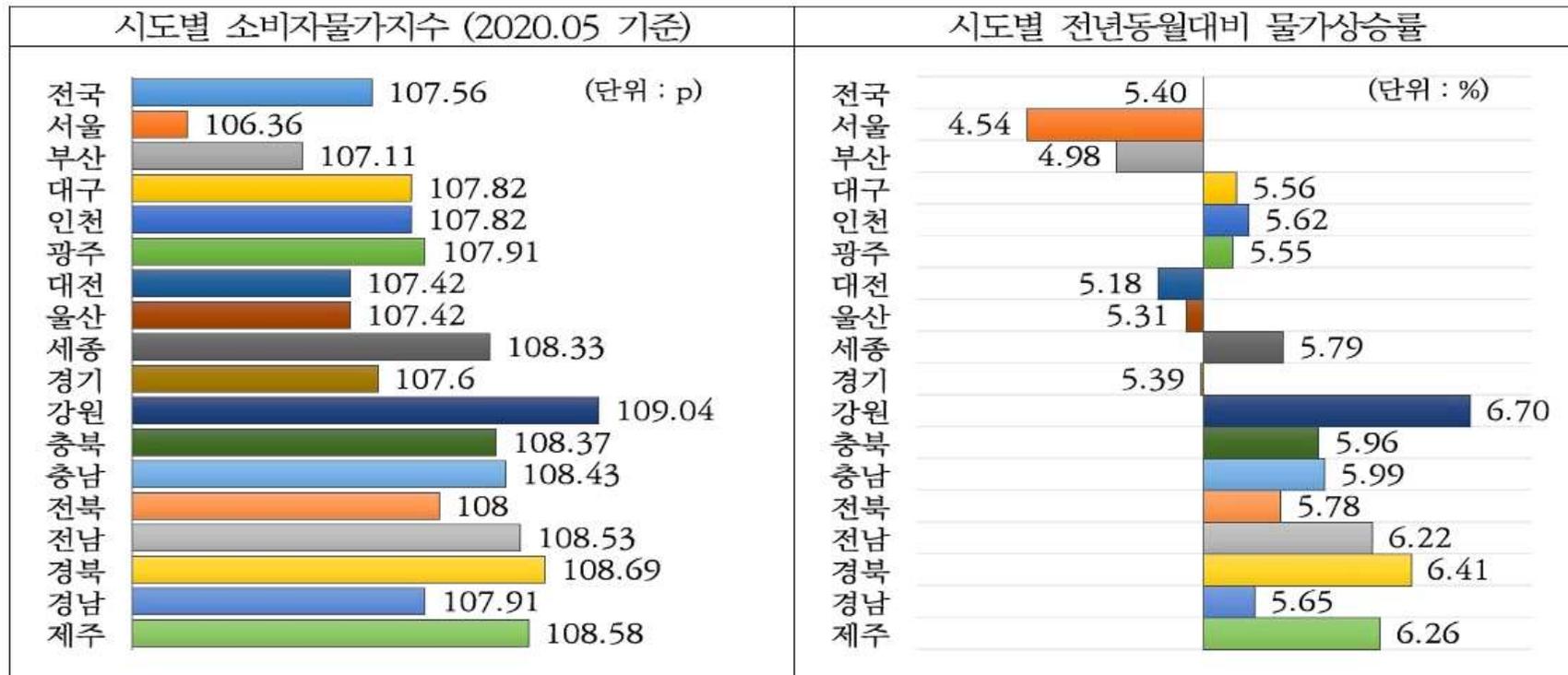
부문별 경기판단¹⁾

종 합 판 단		2022년 2/4분기	향후 전망
		▲ 소폭 증가	▲ 소폭 증가
생 산	제 조 업	◇ 보합	▲ 소폭 증가
	서 비 스 업	▲▲ 증가	▲▲ 증가
수 요	소 비	▲▲ 증가	▲▲ 증가
	설 비 투 자	◇ 보합	◇ 보합
	건 설 투 자	▲ 소폭 증가	◇ 보합
	수 출	▲▲ 증가	▲ 소폭 증가

주 : 1) 전기대비(수출은 전년동기대비) 방향성을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 ▲, ◇, ▼, ▼▼는 각각 증가, 소폭 증가, 보합, 소폭 감소, 감소를 나타냄

충북 지역경제 현황

시도별 소비자물가지수 (22년 5월 기준)



출처 : 충북연구원, 충북 FOCUS 2022-06] 제 205호 - 최근의 물가상승과 충북경제_설영훈 연구위원

충북 지역경제 현황

시도별 소비자물가지수 (22년 6월 기준)

< 지역별 소비자물가 등락률 >

(2020=100, %)

	지 수	등 락 률			지 수	등 락 률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 국	108.22	0.6	6.0	경 기	108.19	0.5	5.9
서 울	106.88	0.5	5.1	강 원	109.77	0.7	7.3
부 산	107.81	0.7	5.7	충 북	109.23	0.8	6.7
대 구	108.33	0.5	6.1	충 남	109.47	1.0	6.9
인 천	108.49	0.6	6.2	전 북	108.76	0.7	6.5
광 주	108.59	0.6	6.3	전 남	109.39	0.8	7.1
대 전	108.18	0.7	5.9	경 북	109.58	0.8	7.2
울 산	107.96	0.5	5.9	경 남	108.67	0.7	6.5
세 종	109.04	0.7	6.4	제 주	109.59	0.9	7.4

출처 : 통계청 2022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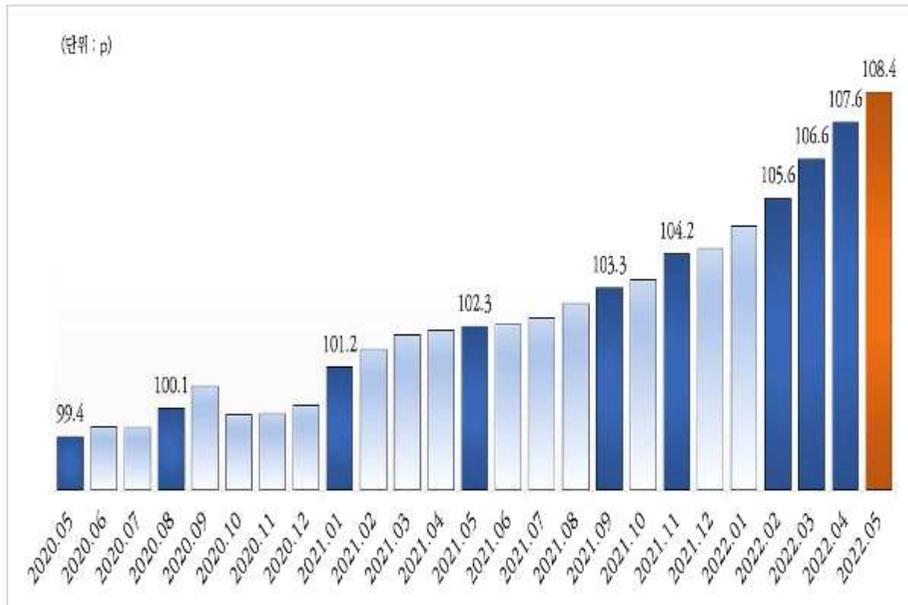
< 지역별 소비자물가 등락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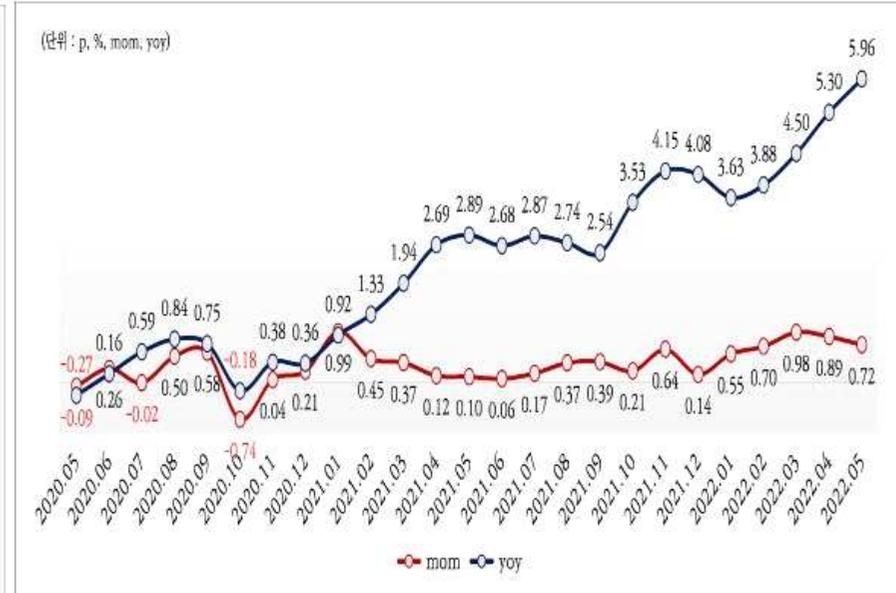
충북 지역경제 현황

충북의 물가수준 (22년 5월 기준)

- 2022년 5월 기준 충북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8.37로 전년동월대비 5.96% 상승하며,
- 전국(107.56)의 물가상승률(5.40%)을 0.57%p 상회하고 있어
- 도민들의 체감지수는 더 높을 것으로 우려



〈그림 2〉 충북의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그림 3〉 충북의 물가상승률 추이

출처 : 충북연구원, 충북 FOCUS 2022-06] 제 205호 - 최근의 물가상승과 충북경제_설영훈 연구위원

충북 지역경제 현황

충북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22년 5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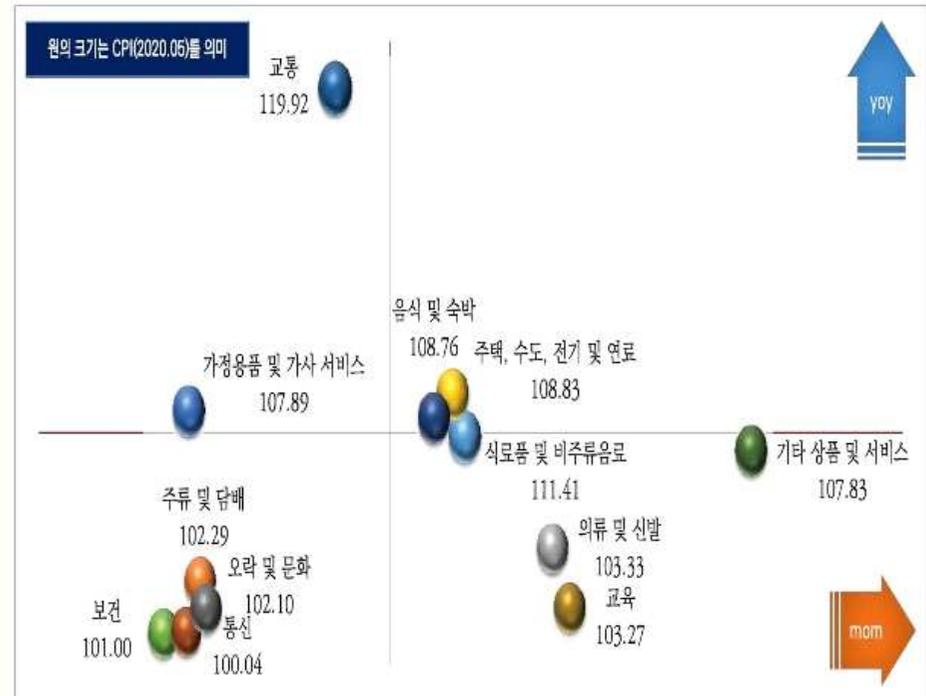
〈표 3〉 충북의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및 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 p. %, 2020=100)

구분	2022.05	mom	yoy
총지수	108.37	0.72	5.96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111.41	0.98	5.87
주류 및 담배	102.29	0.06	2.14
의류 및 신발	103.33	1.28	2.99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108.83	0.94	6.97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	107.89	0.02	6.54
보건	101.00	-0.07	0.80
교통	119.92	0.53	14.84
통신	100.04	0.01	0.85
오락 및 문화	102.10	0.08	1.43
교육	103.27	1.34	1.46
음식 및 숙박	108.76	0.87	6.36
기타 상품 및 서비스	107.83	1.98	5.51

주 : mom은 전월대비, yoy는 전년동월대비 물가상승률을 의미함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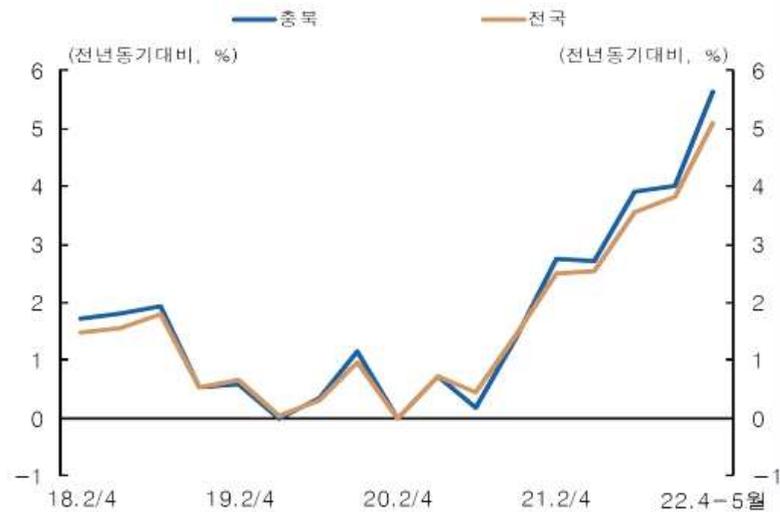
〈그림 4〉 충북의 지출목적별 물가상승률

출처 : 충북연구원, 충북 FOCUS 2022-06] 제 205호 - 최근의 물가상승과 충북경제_설영훈 연구위원

소비자물가 및 주택가격

소비자물가 상승폭 확대

소비자물가 상승률¹⁾



주 :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 통계청

주택매매 및 전세 가격 상승폭 축소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¹⁾



주 : 1) 전분기말월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 한국부동산원

출처 : 한국은행 충북본부 2022.6 충북지역경제보고서

충북 지역경제 현황

인플레이션의 원인

수요측면 요인

□ 수요견인(demand push)형 인플레이션

- 경기가 과열되어 소비, 투자등 수요가 생산능력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발생
-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과도하게 공급(양적 완화)할 경우,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발생
- 향후 물가가 계속 오를것으로 예상하는 물가상승 기대심리가 확산되는 경우, 사재기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면서 발생
- 과거 글로벌 물가안정에 기여했던 중국 등 신흥국들이 이제는 반대로 인플레이션을 확산시키고 있는 실정임
 - 신흥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원자재 및 농산물 수요 증가

공급측면 요인

□ 비용상승(cost push)형 인플레이션

- 원자재 가격상승(1970년대 oil shock), 기후조건악화(가뭄, 태풍),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 등으로 제품 생산비용이 증가하면서 발생
- 최근의 물가상승은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수요는 원래 상태로 회귀하고 있는 반면, 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고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오르며 발생
- 비용상승형 인플레이션의 경우 높은 물가상승세와 경기 침체라는 심각한 이중고, 즉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정책당국은 인플레이션 억제 vs 경기침체 극복 간에 선택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음

충북 지역경제 현황

인플레이션의 영향

- 적정 수준의 물가상승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으나, 과도한 인플레이션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구매여력 감소 → 생활 수준 하락
 - 현금 가치하락 → 저축 의욕 저하
 - 소비심리 악화 → 내수 침체
 - 기대인플레이션⁴⁾ 상승 → 노동자의 임금인상 요구 → 기업의 경쟁력 저하
 - 물가상승 대응을 위한 금리 인상 → 가계와 기업의 부채상환 부담 가중

- 요컨대, 과도한 인플레이션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킴으로써 가계의 소비·저축감소, 기업의 투자생산감소, 정부의 부담가중 등을 야기하여 경제 활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양극화를 심화시킴으로써 사회를 전반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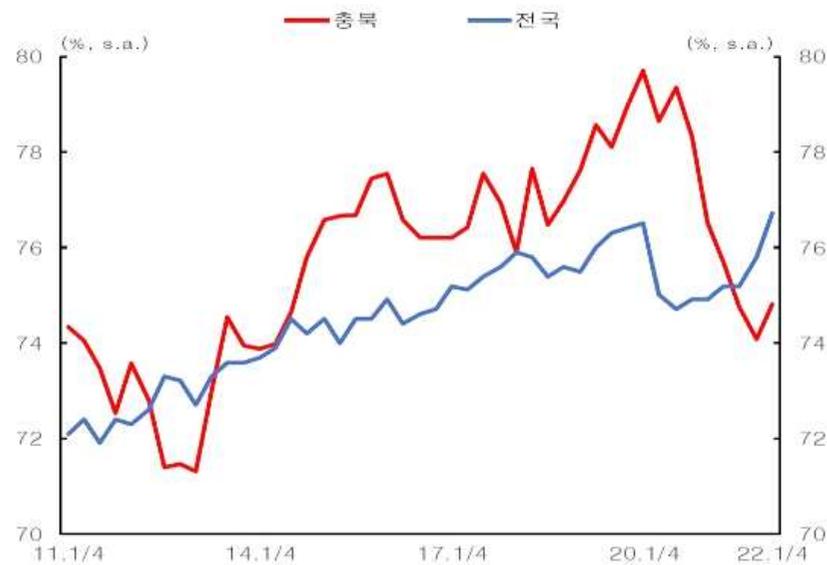


출처 : 충북연구원, 충북 FOCUS 2022-06] 제 205호 - 최근의 물가상승과 충북경제_설영훈 연구위원

충북, 30대 여성의 빠른 노동시장 복귀를 위한 대책이 긴급

- 지역 내 30대를 제외한 연령대의 최근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에 근접
- 충북의 30대 고용 감소세는 상당히 이례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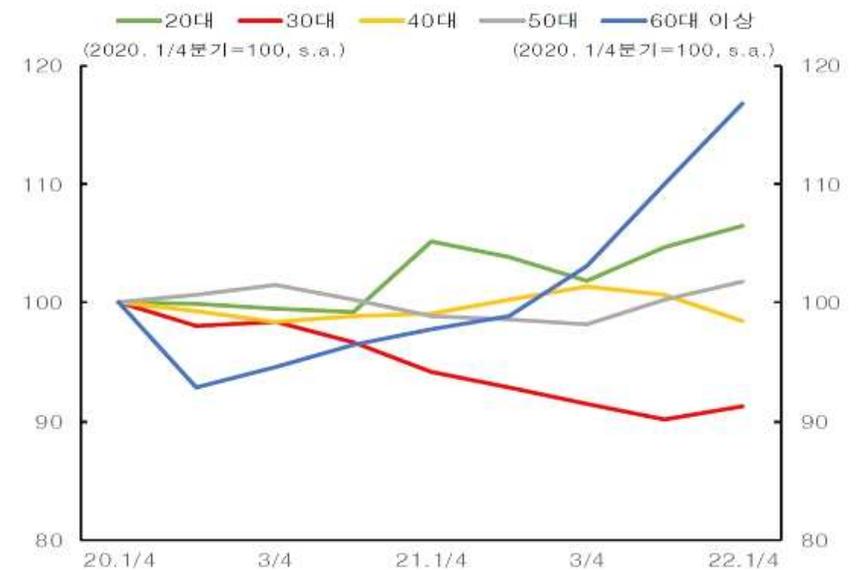
충북 및 전국의 30대 고용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출처: 한국은행 충북본부 2022.6 충북지역경제보고서

충북 연령별 취업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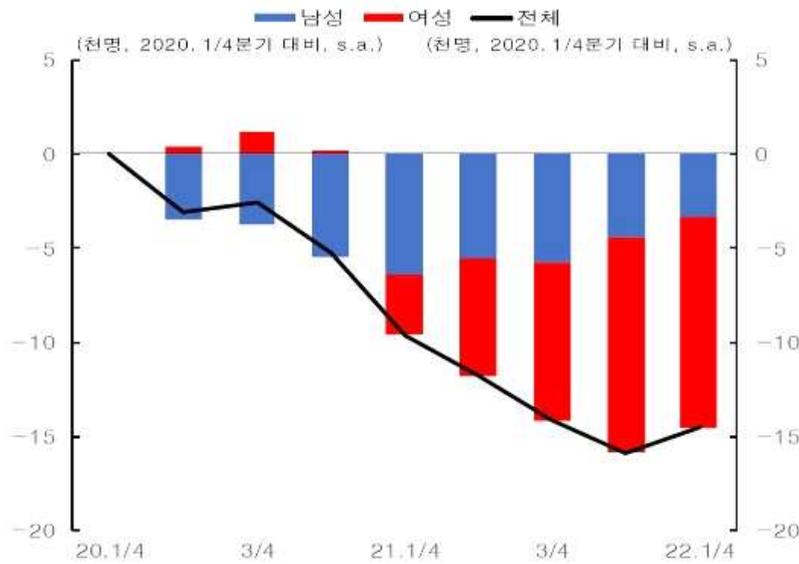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충북, 30대 여성의 빠른 노동시장 복귀를 위한 대책이 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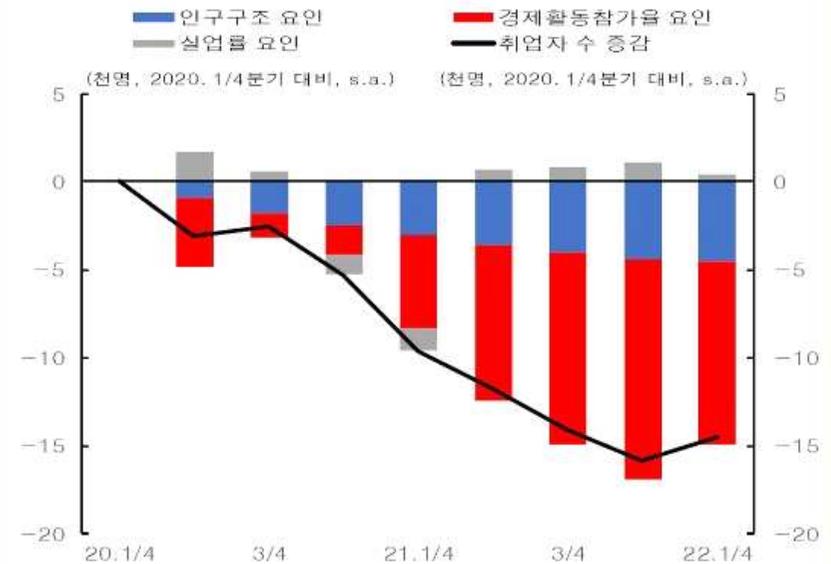
- 충북의 30대 고용감소는 코로나19 기간 중 일자리를 잃은 30대 여성 중 상당수가
- 구직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평가됨

충북 내 성별 30대 취업자 수 증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충북 30대 취업자 수 증감 분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출처: 한국은행 충북본부 2022.6 충북지역경제보고서

정부의 민생경제 안정 정책



청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김 영 배 교수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

정부의 경제 정책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복원

민간중심 역동경제

- ✓ 규제혁파 · 기업활력 제고
- ✓ 기업투자 확대 · 일자리 창출
- ✓ 중소 · 벤처기업 육성
-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체질개선 도약경제

- ✓ 공공 · 연금개혁
- ✓ 노동시장 개혁
- ✓ 교육개혁
- ✓ 금융 · 서비스산업 혁신

자유 · 공정
혁신 · 연대

미래대비 선도경제

- ✓ 과학기술 · R&D 혁신
- ✓ 첨단 전략산업 육성
- ✓ 인구구조 변화 대응
- ✓ 탄소중립 · 기후위기 대응

함께가는 행복경제

- ✓ 사회안정망 강화
- ✓ 근로 유인 및 기회 확대
- ✓ 복지시스템 고도화
- ✓ 지역균형 발전

4대
정책
방향

단면
·
회안
·
대응

민생 안정

- ✓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부담 완화
- ✓ 주거안정

리스크 관리

- ✓ 경제안보 대응
- ✓ 위기관리 강화

출처 : 기획재정부 한눈에 보는 경제

정부의 경제 정책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민생안정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부담 완화

원가부담 완화, 물가구조 개선, 비축 확대 등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물가안정을 유도

- 1 원가 절감·세부담 완화 등을 통한 각종 생계비 부담 경감
- 2 수급불안 품목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 3 유통 고도화, 공정경쟁 확립, 비축 확대 등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 강화
- 4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



주거안정

주택공급 확대,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 도모

- 1 충분한 주택공급 및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 2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한 부동산시장 정상화 프로세스 가속화

리스크 관리



경제안보 대응

복잡 다변화되는 경제안보 이슈를 장기적 안목에서 선제 관리

- 1 종합적 대응을 위한 추진체계 및 제도·재정적 기반 마련
- 2 공급망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자원 확보 및 유턴·외투기업 지원



위기관리 강화

엄중한 경제상황을 종합 고려, 거시경제 및 가계·기업 등 부문별 잠재리스크

- 1 선제적 위험관리·정책공조에 기반한 위기대응 체계 마련
- 2 거시경제여건·취약계층 피해 등 종합고려한 정책조합(Policy Mix) 추진
- 3 가계·자영업자 부채 연착륙 및 재기 지원을 위한 로드맵 마련
- 4 시장 원리를 통한 한계기업 구조조정 촉진

출처 : 기획재정부 한눈에 보는 경제



청주대학교 김영배
CHEONGJU UNIVERSITY

정부의 민생경제 정책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

-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원가상승요인을 최대한 흡수
- 유가상승의 국내 파급영향을 최소화하여 고유가 부담 경감
- 농축수산물 수급관리 및 가격 안정화에 총력

정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마련

- 1차적으로 재정보화가 필요한 과제는 추경에 반영, 국회 확정
- 이외 신속 추진*이 가능한 과제를 선별, 관계부처간 협의·조율

10대 프로젝트는 먹거리·생계비·주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

- ①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료품·자재 등 원가부담 완화
- ② 물가·금리상승 등에 따른 생계비 부담 경감 병행
- ③ 그간 규제 등에 따른 과도한 중산·서민층 주거 부담도 정상화

출처 :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2022. 06. 19 비상경제장관회의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 발표(6.19.)[출처] [비상경제장관회의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 발표\(6.19.\)](#)|작성자 [정책공감](#)

정부의 민생경제 정책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 ①(수입원가 절감) 돼지고기·식용유·커피 등을 비롯한 수입품 원가상승 압력 완화
- ②(식료품비 인하) 김치·장류 등 부가가치세 면제 및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 ③(식재료비 경감) 밀가루가격·비료 매입비 지원 및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 ④(교육비 절감) 2학기 학자금 대출 저금리 동결 등으로 교육비 부담 완화
- ⑤(교통·통신비 인하)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및 5G 중간요금제 출시 유도
- ⑥(이자부담 완화) 안심전환대출 도입 및 저금리 소액대출 확대
- ⑦(취약계층 지원) 긴급생활안정지원금·긴급복지 및 에너지바우처 등 확대
- ⑧(보유세 완화)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재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 ⑨(거래세 완화) 일시적 2주택자 등 취득세·양도세 증과 배제
- ⑩(금융접근성 제고) 생애최초주택구입 LTV 완화·DSR 장래소득 반영 확대

비상경제장관회의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 발표 6.19.

- ① 유류세 인하폭 법정 최대한도로 인하 (30%→37%, 7월1일 시행)
- ② 경유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 50원 한시 인하 (~9월)
리터당 1,750원→1,700원, 7월1일 시행
- ③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상 (40%→80%)
- ④ 농축수산물 등 필수식품 시장동향 모니터링
비축물량 방출·긴급수입 등 수급관리와 가격할인 등 적기 대응
- ⑤ 약 227만 저소득층 가구 대상 최대 100만 원 (4인 가구 기준)
1조 원 규모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개시 (6월 24일~)
- ⑥ 철도·우편·상하수도 공공요금 하반기 동결 원칙, 최대한 관리
전기·가스요금 자구노력 등 통해 인상 최소화

6.19.) [출처] 비상경제장관회의 당



청주대학교 김영배

정부의 민생경제 정책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

유가 안정 정책 및 유류세 인하 정책의 효과



자료_기획재정부

출처 : 정부 기획재정부 경제e야기

정부의 민생경제 정책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기획재정부

생활
밥상물가
안정

1. 수입안정 강화

**돼지고기·식용유·커피 등
수입품 원가상승 압력 완화**

먹거리·산업원자재 중심 14대 품목 할당관세 적용

- 식용유·돼지고기 등 식품원료 7종 연말까지 할당관세(0%) 추가적용, 할당수량 확대
- 나프타 등 7개 산업 원자재 할당·조정관세 연말까지 적용·인하, 적용기간 연장

수입품 부가가치세 면제

- 커피·코코아원두(단, 볶은 것 제외)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23년까지 한시 면제하여 원가약 9% 수준 인하

수입 과세환율 인하

- 관세 과세가격 결정시 적용되는 환율을 '기준환율'로 변경하여 수입비용 경감






기획재정부

생활
밥상물가
안정

2. 식도원안

**단순가공식품 부가가치세 면제 및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병·캔 등으로 포장된 김치·장류 등
단순가공식품 부가가치세(10%) '23년까지 면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확대(+600억원)
(1인당 1만원, 최대 20% 할인)

3. 식재료비 경감

**원료 매입비 지원 및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밀가루 및 사료매입비 지원을 통해 비용부담 경감

-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지원(+546억원), 축산농가 등의 사료구매비용 저리로 지원(+109억원) 등

면세농산물 공제 한도 '23년말까지 10%p 상향하여
식품 제조업·외식업계의 식재료비 부담 완화

어업인 면세경유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239억원)





출처 : 정부 기획재정부 경제e야기 정책브리핑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2022. 5. 31)

정부의 민생경제 정책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기획재정부

생계비 부담 경감

4. 교육비 절감

학자금 대출 저금리 동결 등 교육비 부담 완화

- 22.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22.1학기 수준의 저금리(1.7%)로 동결
- 1·2차 학자금 전환대출에서 제외된 '10~'12년 고금리 ~~전환대출~~ 전환대출(3.9~5.8% → 2.9%) 시행

5. 교통·통행 부담 완화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및 5G 중간요금제 출시 유도

- 승용차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별소비세 감면(5 → 3.5%, 100만원 한도) 6개월 연장('22.6.30 → '22.12.31 종료)
-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확대·지원연장을 통해 경유가격 인상 지속에 따른 교통·물류업계 부담을 완화
- '5G 중간요금제' 3분기부터 출시 유도, 통신비 부담 경감

개별소비세 30% 감면

기획재정부

생계비 부담 경감

6. 이자부담 완화

안심전환대출 등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완화

-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20조원 규모 서민 **안심전환대출** 마련
- 취업준비 청년·대학생 등 대상 저금리 소액대출 지원규모 **1,000억원 확대** (1인당 1,200만원, 금리 3.6~4.5%)

7. 취약계층 지원

긴급생활안정지원금·긴급복지 및 에너지바우처 등 확대

- 저소득층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가구)의 **긴급생활지원금** 신규 지급
- **긴급복지 재산기준 완화**('22.7)하여 지원대상을 확대(+12만명), **생계지원금**도 131 → 154만원(4인가구)으로 인상
-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를 확대 저소득 가구 냉·난방비 부담 완화(+916억원)

출처 : 정부 기획재정부 경제e야기 정책브리핑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2022. 5. 31)

정부의 민생경제 정책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기획재정부

8. 보유세 완화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세부담 '20년 수준 환원 추진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가격 급등 이전(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 추진(3분기)

주거
안정

9. 거래세 완화

일시적 2주택자 등
취득세·양도세 증가 배제

취득세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증가배제 인정 기한 2년으로 확대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증가 완화 등 5월 중 마무리

10. 주택경기성

생애최초주택구입
LTV 완화·DSR 장래소득 반영 확대

생애최초주택구입 가구 LTV 상한 완화 (6~70→80%, 3분기)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폭 확대(3분기)

기획재정부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안정

먹거리·생계비·주거 등
3대분야 중심으로

출처 : 정부 기획재정부 경제e야기 정책브리핑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2022. 5. 31)

정부의 민생경제 정책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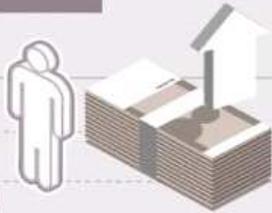
주거비 부담경감

· 전세대출(버팀목) 확대

청년 7,000만원 > 2억원

신혼 수도권 2억원 > 3억원

지방 1억6,000만원 > 2억원



· 갱신계약 만료 서민 임차인 대상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 및 대출한도 확대

수도권 대출한도 1억2,000만원 > 1억8,000만원

지방 8000만원 > 1억2천만원

수도권 보증금 3억원 > 4억5,000만원

지방 2억원 > 2억5,000만원

· 청년 월세지원 (중위소득 60%이하) 최대 월 20만원('22.11월~,'23년)

출처 : 연합뉴스 [그래픽]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 주요 내용 22.07.20

공공임대 등 주택공급 확대

·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임대공급 확대

국민·행복주택 2만3,000가구 > 2만5,000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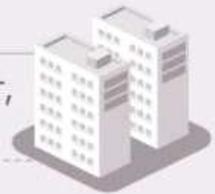
전세임대 2만1,500가구 > 2만4,500가구

·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주택재고 순증 효과 건설임대 공급 활성화,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 정상화

도심내 임대주택공급 확대

28만7,000가구 > 33만8,000가구('27년까지)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

· 전세가율 급등 지역 등 사전 관리

지자체 등에 주의 지역 통보, 특별 관리

·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통한 전세피해 예방

사회배려계층 50~60% 할인(10%p 할인율 확대)

상습 미반환임대인 공개, DB 구축 통해 정보

비대칭성 해소

자료: 국토교통부

정부의 민생경제 정책

부동산 시장 정상화

관계부처 합동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6.21.

임대차 시장 불안요인 선제 대응

- ✔ 임차료 5% 이내 인상한 '상생임대인' 지원 강화, 계약 갱신유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실거주 2년 요건' 완전 면제
- ✔ 8월 이후 갱신계약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 지원 강화
전세 평균 가격상승률 반영, 버팀목전세대출 보증금 및 대출한도 확대
'22년 8월 1일부터 적용 ▲ 수도권 대출한도 : 1.2억원 → 1.8억원
▲ 지방 대출한도 : 0.8억원 → 1.2억원
- ✔ 그 외 '일반 임차인' 지원 강화
월세세액공제율 최대 12% → 최대 15%로 확대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연 300만 원 → 400만 원으로 확대

부동산시장 정상화 과제 역점 추진

- ✔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정상화' 추진
종부세는 세율 조정 포함 근본적 개편안을 7월까지 확정, 세법 개정안 반영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소득 가격 제한 없이 취득세 면제 (200만원 한도)
- ✔ 주거안정 지원 위한 '실수요자' 금융 지원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정책모기지에 '체증식 상환방식' 신규 도입
*대출 초기 상환 원금의 비중이 적고(이자 비중 큼), 시간이 지나면서
상환 원금의 비중이 서서히 커지는 방식
- ✔ 지역·사업유형·연차별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7~8월 중 발표)
생애주기별 맞춤형 청년주거 패키지(8~9월 중 발표)

출처 : &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2022. 06. 21 관계부처 합동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출처] 시장기능 회복·공급확대, 양대 축 삼아 부동산시장 정상화 적극 추진합니다 | 작성자 정책공감

 **청주대학교** 김영배
CHEONGJU UNIVERSITY

정부의 민생경제 정책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저소득층 지원 정책

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대상
- 급여 자격별 · 가구원 수에 따라 선불형 카드 형태로 차등 지급
-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약 227만 가구(중복 제외)에게 지급
-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지류제외)로 지급 받을 수 있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

출처 : 보건복지부 22.06.19 저소득층_약_227만_가구에_한시_긴급생활지원금_지급_실시

정부의 민생경제 정책 저소득층 지원 정책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① (기초생활수급)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② (법정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지출, 차상위장애인(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확인
 ③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

2. 지원금액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지급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의료	400,000원	650,000원	830,000원	1,000,000원	1,160,000원	1,310,000원	1,450,000원
보장사실	1인당 200,000원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300,000원	490,000원	620,000원	750,000원	870,000원	980,000원	1,090,000원

3. 지급일자 2022년 6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4. 지급방법 선불형 카드 또는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수령
* 지역에 따라 모바일 카드 형태로 지원 가능 | * 보장사실 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읍 생계급여 담당부서에서 사실관계 보고금 교부

5. 문의사항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단가의 근거는?

-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부담분에 대한 지원 취지를 고려,
 - 생계·의료 1인 기준 40만 원은 '21년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을 고려하여 산출

- '22. 3월 생활물가지수 인상률(전년대비): 4.3%
 - * '21년 생활물가지수 103.21, '22.3월 107.62('20년 = 100)
- '21년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가계동향조사): 1,150,350원
-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 : 33,880원*
 - * [1,150,350원 / 1.46명(1분위 평균 가구원수)] × 0.043(생활물가지수 인상률)
- 연간 1분위 가구 1인당 추가 부담 : 406,562원 (33,880×12개월)

출처 : 보건복지부 22.06.19 저소득층_약_227만_가구에_한시_긴급생활지원금_지급_실시

정부의 민생경제 정책

저소득층 지원 정책

고유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 보건복지부는 제도 변경에 필요한 예산 873억 원을 제2회 추경을 통해 확보

생계지원금 지원 단가 인상 -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한시적 완화('22.07.01-12.31까지)

지원대상: ① 위기사유 발생으로 ② 생계유지가 곤란한 ③ 저소득층

소득·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원/월	1,458,609	2,445,063	3,146,025	3,840,810	4,518,386	5,180,253	5,835,444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5,191원씩 증가(8인 가구 6,490,635원)

- (재산) 대도시 **2억4100만 원**, 중소도시 **1억5200만 원**, 농어촌 **1억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주거지원의 경우 **800만 원**)

지원내용(4인 기준/월): 생계(**130.4만 원**), 의료(1회 **300만 원** 이내)

* 기타 급여로 주거, 복지시설이용, 교육비, 연료비(10월~3월),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

출처 : 보건복지부 22.06.23 고유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시행합니다 | 작성자 보건복지부

정부의 민생경제 정책

저소득층 지원 정책

고유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 생계지원금 지원 단가 인상 -
-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한시적 완화('22.07.01-12.31까지)

생계지원금의 단가는 고유가, 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그간 **기준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30% 수준까지 확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단위: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현행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인상액	583,400	978,000	1,258,400	1,536,300	1,807,300	2,072,100
(인상률)	(19.35%)	(18.40%)	(18.04%)	(17.73%)	(17.23%)	(16.82%)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단위: 원



출처 : 보건복지부 22.06.23 고유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시행합니다 | 작성자 보건복지부

정부의 민생경제 정책

저소득층 지원 정책

고유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일반재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본인 또는 동거가족명의로의 주택(임차 포함))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

(금융재산) 조회된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상향(기준중위소득 65%→100%상당)

<일반재산 합계액 인상 효과>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A] 기준금액(현행)	2억4,100만원	1억5,200만원	1억3,000만원
↓ (한시 완화기준 운영 전후) ↓			
[B]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신설)	6,900만원	4천200만원	3천500만원
[A+B] 조회결과 재산총액	2억4,100만원 ~3억1,000만원	1억5,200만원 ~1억9,400만원	1억3,000만원 ~1억6,500만원

* 공제 적용 산식 : (조회결과 재산총액)-(공제액) ≤ (기준금액)

<공제 수준 상향 효과(4인가구 기준)>

[A] 금융재산기준액	600만 원		
[B] 생활준비금 공제액	(현행) 3,329,000원	⇒ (상향)	(상향) 5,121,000원
[A+B] 조회결과 금융재산 총액	9,329,000원	1,792,000원 증가	11,121,000원

* 공제 적용 산식 : (조회결과 금융재산총액)-(공제액) ≤ (기준금액)

출처 : 보건복지부 22.06.19 저소득층_약_227만_가구에_한시_긴급생활지원금_지급_실시

정부의 민생경제 정책

저소득층 지원 정책

고유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 생계지원금 지원 단가 인상 -
-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한시적 완화('22.07.01-12.31까지)

보건복지부는 제도 변경에 필요한 예산 873억 원을 제2회 추경을 통해 확보

- 실직, 휴, 폐업, 질병, 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 군,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 및 지원을 요청 가능
-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 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 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의 민생경제 정책 저소득층 지원 정책

고유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위기 사유(위기상황해당시 先 지원 後조사원칙,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시행규칙제1조의2)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 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 임차료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 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출처 : 보건복지부 22.06.23 고유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시행합니다 | 작성자 보건복지부

정부의 민생경제 정책

저소득층 지원 정책

고유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긴급지원 지원금액

① 생계지원(인상 후)

(원/월)

가구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83,400	978,000	1,258,400	1,536,300	1,807,300	2,072,1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2,000원씩 추가 지급

② 의료지원 한도액 : 300만 원 이내

③ 주거지원 한도액

(원/월)

지 역 \ 가구구성원 수	1~2 인	3~4인	5~6인
대 도 시	387,200	643,200	848,600
중 소 도 시	290,300	422,900	557,400
농 어 촌	183,400	243,200	320,300

④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원/월)

입소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35,900	914,200	1,182,900	1,450,500	1,719,200	1,987,700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78,000원씩 추가 지급

⑤ 교육지원 금액

(원/분기)

구 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124,100	174,700	207,700원 및 수업료·입학금

⑥ 그 밖의 지원 금액

(원/월)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106,700	700,000	800,000	500,000 이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출처 : 보건복지부 22.06.19 저소득층_약_227만_가구에_한시_긴급생활지원금_지급_실시

정부의 민생경제 정책 저소득층 지원 정책

고유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질의 응답

1.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75%	1,458,609	2,445,063	3,146,025	3,840,810	4,518,386	5,180,253	5,835,444

※ 기준중위소득 75% : 긴급복지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기준

2.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 공제율 인상 현황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65% (현행)	1,265,000	2,120,000	2,727,000	3,329,000	3,916,000	4,490,000	5,058,000
100%상당 (인상후)	1,944,000	3,260,000	4,194,000	5,121,000	6,024,000	6,907,000	7,780,000

출처 : 보건복지부 22.06.19 저소득층_약_227만_가구에_한시_긴급생활지원금_지급_실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저소득층 및 사각지대 지원 정책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

지방 공공요금

- 지방 공공요금이 생활물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반기 동결 기조 하에 행안부와 지자체가 최대한 관리
- 既확정분 이외에는 지방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 추진
* 상·하수도요금, 쓰레기봉투료,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전철요금 등
- 지자체 현장점검을 통해 요금동결 협조를 요청하고 행안부와 광역지자체 간 물가현안점검회의를 수시 개최하여 동향 점검
- 지방물가 안정관리 실적 평가를 통해 물가안정 우수지자체에 인센티브(특교세 110억원)를 지원하여 적극적인 물가안정활동 유도

출처 : 보건복지부 22.06.23 [고유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시행합니다](#) | 작성자 보건복지부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저소득층 및 사각지대 지원 정책

지방 정부의 역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초** 민생 안정을 위해 새로 출범할 지방자치단체도 노력해 주길 당부
행정안전부는 7월 21일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2022년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

- 민생경제 점검 및 대응방안, 지방자치단체 조직·인력 운영 방향,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추진계획에 관한 설명과 함께 지자체에 대한 협조 요청
- 기획재정부는 공공요금 안정 등의 협조를 요청
- 행안부는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의 2022년 수준 유지, 신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인력 재배치, 위원회 정비 등 자치단체 조직·인력 운영 효율화 추진 방향을 설명
- 자치단체별 자체 조직진단, 위원회 통·폐합, 적극적인 인력 재배치 등에 대해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
- 법무부와 행안부는 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고향사랑기부제 등 지방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지자체의 협조를 구함

출처 : 보건복지부 **22.06.23** [고유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시행합니다](#) | 작성자 보건복지부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저소득층 및 사각지대 지원 정책

제주도 민생경제 회복 지원대책 신3고(高) 위기 극복... 제주도, 민생경제 회복 사활

- 7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1차회의 열고 “서민경제활력” 한마음
- 회의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조례」 에 근거해 도의회, 연구·학계, 경제단체, 소상공인·기업, 관광, 1차산업, 건설, 소비자, 지역사회, 행정 등 **각분야별 대표 등 30명의 경제정책협의회** 위원이 참석
- **전도민 재난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등 제주형 민생경제 회복 대책 논의**

▲전도민 재난 긴급 생활지원금(1인당 10만 원) 지급

- 지난 7월 8일 **도의회와 긴급정책협의회를 통해 전격 합의**
- **전도민 재난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700억 원을 편성**
- 이르면 8월부터 **총 69만 9,250명**(6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에게 **1인당 10만 원의 ‘탐나는전’ 지역화폐를 지급**

▲관광·중소기업육성·농어촌진흥기금 등 3대 기금 대출 상환연장이차 보전

▲코로나 사각지대 해소 및 분야별 지원 등의 대책

출처 : 제주도 보도자료 22.07.14 신3고(高) 위기 극복... 제주도, 민생경제 회복 사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저소득층 및 사각지대 지원 정책

제주도 민생경제 회복 지원대책 신3고(高) 위기 극복... 제주도, 민생경제 회복 사활

- 제주지역 소비자물가 7.4% 상승...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 수준
- 14일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1차회의 열고 “서민경제활력” 한마음
-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도민 재난 긴급 생활지원금 지원
- ◇ 금융 취약계층 지원 확대 및 분야별 사각지대 해소
- ◇ 서민물가 안정을 통해도민 일상생활의 안정적인 영위 지원

제주지역 물가동향 및 대처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품목별 물가구조 개선, 지방 공공요금 동결, • 장바구니 물가 등 가격동향 공개, • 착한가격업소 선정지원 강화, • 지역사회 동참 물가저감 노력 전개, • 물가안정 비상종합상황실 전환 상시가동

코로나 민생경제 지원
① 전 도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70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도민 1인당 10만원 / 탐나는전 지급) * 주민등록인구(5.30)기준 698,435명
② 금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대 정책기금 대출 상환기간 연장 이차 보전 등 위한 기금 적립) * 중소기업, 관광, 농어촌 진흥기금 상환기간 연장 이차보전
.(소상공인 임차 특례 보증)

출처 : 제주도 보도자료 22.07.14 신3고(高) 위기 극복... 제주도, 민생경제 회복 사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저소득층 및 사각지대 지원 정책

제주도 민생경제 회복 지원대책 신3고(高) 위기 극복... 제주도, 민생경제 회복 사활

코로나 사각지대 해소 및 민생경제 지원
<p>▪(1차산업)</p> <p>*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농가부담 10% 완화), 어업인 유가연동 보조금, 취약 소농 및 저소득 어가 한시지원, 어업인 수당, 가공용감귤 수매가격 차액보전 등</p>
<p>▪(소상공인·일자리)</p> <p>* 탐나는천 가맹점 인센티브, 공공근로 확대, 소상공인 휴폐업자 및 간이과세자 손실보전, 특고·프리랜서, 착한가격업소 재료비, 전통시장 택배비용 지원 등</p>
<p>▪(문화·관광)</p> <p>* 예술인 및 공연단체 사각지대 지원, 관광진흥기금을 통한 관광사업체 지원, 영세관광사업체 취업·유지 장려금, 생활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등</p>
<p>▪(청년·취약계층)</p> <p>* 구직청년 생활지원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한시지원,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 긴급복지 지원, 공공 임대 주택사업(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 등)</p>
<p>▪(운수업계)</p> <p>* 전세버스 및 일반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일반택시업체 및 전세버스업체 재난지원금, 전세버스 리무진 구조개선 지원, 택시요금 소액카드 결제 지원 등</p>
<p>▪(보건·방역)</p> <p>* 격리치료 생활지원비, 격리입원 치료비, 생활치료센터·선별진료소 운영, 코로나진단검사비, 신송항원검사 진단키트 한시지원, 코로나 의료장비 지원 등</p>

출처 : 제주도 보도자료 22.07.14 신3고(高) 위기 극복... 제주도, 민생경제 회복 사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저소득층 및 사각지대 지원 정책

제주도 민생경제 회복 지원대책 **신3고(高) 위기 극복... 제주도, 민생경제 회복 사활**
물가 안정 시까지 비상종합상황실 전환 상시 가동

(비상종합상황실 전환 운영) 6개분야 8개반 상시 운영

(중점관리품목) 돼지고기 + 신석식품 + 석유제품 (현장 중심) 물가지도 점검으로 유통질서 확립

* 현재까지 156회, 2,409개소 점검, 가격/원산지표시 위반 등 35건 적발

* 지역물가 안정 및 시장구조 개선 등에 제안공모 등 시민참여 확대 추진

구분	기존	확대(22.3)+비상 전환(22.7.)	제도개선
종합상황실	5개분야 7개반	6개분야 8개반	제주지역 물가 구조적 개선
지도점검	분야별 지도점검	합동 지도점검 확대 실시	
물가정보	매주 조사, 공개	도민 홍보 강화(리플릿, SNS 등)	
착한가격업소	상수도요금 감면 전기요금 지원 등	재료구입비 지원 착한가격업소 발굴단 운영	
지역사회	소비자단체 참여	사업자단체 참여 유도 경유, 휘발유가격 시민감시단 운영	

출처 : 제주도 보도자료 22.07.14 신3고(高) 위기 극복... 제주도, 민생경제 회복 사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충청북도 및 청주시 등 지자체 비상대응 방안

1. 지방정부 경제정책협의회 활성화

충청북도 경제정책협의회 및 청주시 경제정책협의회 2019년 이후 개최 했는가?

- 비상경제정책협의회 매월 정례화 및 부문별 경제정책TF 상시 운영
- 경제정책협의회는 도의회, 연구·학계, 경제단체, 소상공인·기업, 관광, 1차산업, 건설, 소비자, 지역사회, 행정 등 각분야별 대표 등 30명 위원으로 구성
- 부문별 TF는 5+a명 내외로 구성하고 현황 모니터링 및 대응 정책방안 마련 후 전체회의에 상정해 논의 및 정책 합의
- 각분야별로 관련 이해당사자들 및 시민 다수가 참여하는 공개 간담회 및 토론회를 상시 운영하여 의견수렴

2. 지방의회 비상경제정책특별위원회 운영

- 비상경제정책특별위원회 매월 정례화 및 상임위원회별 비상경제정책소위원회 상시 운영
- 상임위별 소위원회는 관련 부문 의회, 행정, 연구학계, 경제단체, 소상공인, 지방기업, 관광, 1차산업, 건설, 소비자, 지역사회 등 각분야별 대표 등 10명 내외로 구성
- 각 상임위별 소위원회는 관련 이해당사자들 및 시민 다수가 참여하는 공개 간담회 및 토론회를 상시 운영하여 의견수렴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
- 상임위별 소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대응 정책안 마련 후 특별위원회에 상정해 논의 후 행정부와 정책 협의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시대,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는?

일시 | 2022년 7월 25일(월) 13시 30분

장소 | 청주시도시재생허브센터 대회의실(2층)

주최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상공인의 한숨 , 문제해결의 실마리

정효섭 회장
(청주시소상공인연합회)

코로나 위기속에 소상공인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넘어 생존하기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유례없이 힘든시기를 지냈지만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고물가 , 고금리 , 고유가에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서민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살리기위한 정부의 강한의지와 함께 막대한 자금지원정책과 신속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정상화를 넘어 소상공인들이 생존할수 있도록 힘쓰고 있지만 현장의 체감하는 만족도 현저히 떨어진다

2021년 작년연말기준

2조5천억 소상공인피해지원 대출의 집행률은 41% 밖에 되지 않는다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 집합금지업종 임차료용자 8천억중 5천381억 집행 (집행률 67.3%)

소상공인 고용연계용자 5천억중 2천 397억 집행

(집행률 47.9%)

저신용소상공인용자 1조2천억중 2천499억 집행 (집행률 20.8%)

가장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 ,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자금의 집행률이 20.8% 밖에 안된다는 문제는 심각하다

그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의 움직임은 없다는 것이 더욱 큰문제가 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소상공인들이 영업중예.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고 기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정보를 취득해서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는 사실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있다

청주시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과 산하 청년위원회 청년회원들이 찾아가는 홍보도우미 , 온라인 스마트폰교육 도우미 활동을 통한 현장방문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만족도 아주높다

현장방문을 통해서

정책홍보책자전달 온라인소통의 교육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담은 활동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참고적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안에는

소상공인 지원정책마련

소상공인 보호육성지원

소상공인 현황파악 및 여건개선사항마련

지자체 상호간의 협력과 소상공인 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실태조사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통계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청주시경제정책과 청주시의회 청주시소상공인진흥공단

청주시소상공인연합회는

청주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확한 현황파악과 실태조사 조차 해본적이 없기에 이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최소한의 문제해결에 앞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북도 고용안전망 구축에 대한 제언

신 의 수 (주)제이비컴 대표이사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일할 자유가 있고, 일하고 싶은 의사와 능력이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한다는 의미이다. 일자리는 경제의 근간이고 생산의 핵심이며 소비의 원천이다. 개인에게 있어서 소득을 통한 생계유지가 가능케 하고 자아실현의 장이 되기도 한다.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미래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며 국가의 고용안전망 구축에 대한 기대가 커져가고 있는 요즘 국내외 경제 동향은 해결할 문제가 산더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가?

역대 정부의 성과에서 일자리 정책에 대하여 성공한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가 아닌 세금으로 만드는 일시적 일자리 양에 치중해 왔으며 장기적인 경제지원을 통한 자율적 일자리 창출이 아닌 단기적 지원책을 통한 단기적 일자리 창출을 강압적으로 유도해 왔다. 또한 보여주기식 정책 발표에 급급해 통계 수치에만 관심을 가져 왔다. 미래 먹거리인 신산업 육성을 통한 장기적이며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보다는 기존 방식대로 위험요소가 없고 손쉽게 실행할 수 있는 복지적, 시혜적 일자리 만들기에 온통 정신을 쏟아 왔다. 5년의 임기 동안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에 임기 내 가시적 성과를 위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우를 지속적으로 범하고 있다.

그렇다면 헌법32조에 천명한 것처럼 국민에게 근로의 권리와 근로의 의무를 어떻게 하면 부여할 수 있을까?

우선,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큰 틀에서의 정책 방향이다. 일자리 예산을 늘리고 시혜적, 단기적, 공공 일자리 창출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

둘째, 모든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우는 규제 완화 및 철폐에 대한 약속을 현장과의

소통을 통하여 실천함으로써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일자리 창출은 다양한 형태의 기업(주식회사,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단지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 될 것이다

넷째, 고용서비스 망의 구축이다. 청년, 진로단절 여성, 중장년, 퇴직자 등의 특성에 맞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일자리 정책의 목표가 수정되어야 한다. 역대 정부에서는 앞서 지적한대로 통계수치만 정책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 취업률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어 국민의 권리를 뒤돌아보지 않았다. 돈을 버는 수단으로서의 직업과 일자리가 아닌 국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직업과 일자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민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중장기적 직업상담이 중요한 이유이다

여섯째, 4차산업과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많은 고용환경의 변화를 가져 왔다. 앞으로 정규직보다는 프리랜서, 깃노동자, 1인 기업 등의 형태가 각광 받을 것이며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공간에서의 노동 활동이 아닌 공간과 시간의 자유로움을 느끼며 근로하는 방식이 늘어나고 있다. N잡리라는 말이 있다. 2개 이상 복수를 뜻하는 'N'과 직업을 뜻하는 'job', 사람을 뜻하는 '~러(er)'가 합쳐진 신조어로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이란 뜻이다. 본업 외에도 여러 부업과 취미활동을 즐기며 시대 변화에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도록 전업(轉業)이나 겸업(兼業)을 하는 이들을 말한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국가든 개인이든 기존의 직업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일곱째, 고용서비스 형식의 변화이다. 형식적 취업지원 서비스는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미스매칭을 강화시키고 있다. 기업에게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는 구인난에 허덕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구직자에게는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구직난을 경험하게 한다. 예를 들어 구직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지원금과 수당을 받기 위하여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함으로써 상담과, 교육, 훈련 등이 효과를 거두기보다는 하나의 행정업무로 이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덟째, 고용서비스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동안의 서비스 제공 방식을 보면 교육과 훈련에 치우쳐져 있다. 그마저도 정확한 목표의식에 의한 교육 훈련이 아니라 무료로 제공되는 교육과 훈련을 백화점 쇼핑하듯이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 효과를 거두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20년 배워서 40년 직업생활을 하던 과거와는 다르다. 그러므로 평생직업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과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상담서비스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1:1 직업상담 방식의 확대가 필요하다. 직업교육과 훈련, 상담이 동시에 이루어 질 때 그 효과는 클 수 밖에 없다.

아홉째, 실업상태에서 취업이 아닌 예방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병이 걸렸을 때 치료에 드는 시간과 비용보다는 예방에 소용되는 시간과 비용이 훨씬 덜 든다는 것이 증명되어 정책이 국민들의 건강을 질병으로부터 예방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실직도 마찬가지다. 실직이라는 생애사건은 개인에게 있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정도의 고통이 따른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것처럼 개인과 국가, 사회에 큰

아픔을 주는 사건이다. 개인에게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타격을 주는 실직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되는 시간과 경제적 비용, 그리고 심리적 자존감과 효능감 저하 등을 경험하지 않도록 스스로 준비하게 하거나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 중심을 옮겨 온다면 훨씬 더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을까? 고용보험 기금 운용 면에서도 예방적 차원의 정책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열번째, 고용허가제의 개정이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04년 기존 외국인 산업 연수생 제도와 병행 시행되다가 2007년 고용 허가제로 통합되었다. 골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기간 동안 한국인과 동일하게 노동 관련 법령의 보호를 받는 것이다. 또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취업 기간은 2009년 개정된 원칙에 따라 3년간 일한 후 고용주가 요청할 경우 1년 10개월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고용주의 허가가 있어야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고 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 최대 5년 미만으로 고용이 한정되어 인력난에 시달리는 국내 사업장이 숙련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점,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이 불법체류자가 되기 쉽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21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외국인근로자 활용기업 79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근로자 수요조사에서 92.1%가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의 대폭 확대(65%)를 요구하였다. 비단 제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농업, 어업, 축산업, 요식업 등 산업 전 분야에서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으며 보다 현실적으로 고용허가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윤석열정부에서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신기술 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민간중심의 일자리 창출, 4차산업혁명, 생산인구감소 등 미래대응을 기본방향으로 취업지원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촉진(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중심, 고용안전망의 Activation강화 등)을 실천전략으로 수립하였다. 일자리 사업의 효율화로 기업이 인력난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진입을 촉진시키는 고용서비스의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현 정부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보면 중소기업에서 재직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능력개발전담주치의(커리어닥터)제도를 도입하여 현장 맞춤형 훈련 컨설팅을 도입한다고 한다. 특히 구인 애로 해소를 위한 입국 대기중인 외국인 인력 5만명을 7월이후 배정한다. 또한 23년도 기업 유형에 따른 인사, 노무컨설팅부터 고용환경개선까지 종합 지원하는 기업도약보장패키지도 추진한다.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역량을 AI기반 진단시스템으로 분석해 진로지도+훈련+일자리정보제공 패키지로 하는 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도 추진한다.

그동안 지방정부에서는 중앙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따라 하기 급급해 왔다. 지역산업과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서비스 정책이 필요하다. 충북도의 고용서비스 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면

첫째, 고용서비스 정책의 목표가 취업률에 두기 보다는 도민이 행복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 직업상담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 져야 하겠다. 진로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과 관련한 일련의 활동이다. 개인의 흥미와 적성, 재능, 가치관 등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가는 여정 동안 전 세대에 걸친 직업상담서비스센터(가칭 진로이음센터)를 제안한다. 단지 취업 알선이 주 업무가 아닌 충북도민의 행복한 진로를 이어 주는 방법을 고민하고 해결 해 주는, 그 결과 취업률도 높고 고용률도 높은 충북의 실현을 기대해 본다

두 번째, 각 시군 일자리센터를 통합 관리 운영하는 재단의 설립을 제안한다, 11개 시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북의 산업 특성에 맞는 인재 양성, 고용서비스 유관 기관과의 협업, 각 세대별, 대상별 진로이음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상담의 사례를 통한 상담사 역량 개발, 구체적 취업 알선 등을 통괄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 복지사각지대의 죽음부터 막아야 ...

양준석 대표활동가
(행복디자인 사람)

“ 두달간 고기, 과일 못 샀다는 기초수급자들의 민생현실”

- 경향신문, 2022.7.1 사설

“ 빈곤학생 폭염사각지대, 차라리 학교에 ”

- KBS 2022. 7. 21

“ 고물가 지속된다는데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으로 충분할까 ... 기준 중위소득 현실화하고 물가반
영해야 ” - 경향신문. 2022. 6, 20

• 무슨 일이 벌어 지고 있는가?

1. 먹거리문제

- 위 7월 1자 경향신문 사설은 빈곤사회연대와 한국도시연구소등이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를 심층 상
담한 결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생계비는 치솟는 물가를 따라가기 힘든 현실을 설명함.
- 통상적으로 수급권자의 생계비 중 식비 비중이 높은 현실이고 이로 인해 최소한의 먹거리를 절감
함으로써 어려운 생활을 이어감. 결국 건강과 체질에 따른 영양소는 생각도 못한 건강의 악화유발
- 결국 생활비를 아끼고 끼니를 줄이고 집안에 움츠러드는 이들은 갈수록 고립 단절될 수밖에 없음.
- 특히 먹거리로 문제가 되는 계층은 노인으로 그 심각성은 더욱 가증될 것임. (아래내용)

[참고 : 재가노인의 식사돌봄이 필요한 이유]

- 2020년 노인실태조사2)에서 전체 노인의 84%가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54.9%는 2개 이상
의 만성질환이 있는 복합이환자로 나타났음. 이로 인해 2020년 기준 노인 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의
43.1%를 차지하는 등 전체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노년기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노인의 건강은 노후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고, 특히 식생활은 노인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최근 가정의 핵가족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자식과
함께 사는 대신 노인들만 사는 세대가 증가하였고, 그 결과 식사 준비 및 조리 등의 가사 활동이 자
식이 아닌 노인 자신의 부담이 됨에 따라 노인의 식생활은 더욱 나빠질 위험이 있으며, 심한 경우
영양불량 상태까지 우려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7.18.)

2. 기후위기에 대한 주거문제

○ 냉방

-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이 지구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다가오는 겨울은 한파를 걱정할 수 밖에 없음.
- KBS의 보도는 쪽방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귀가후 집에 있기 힘들어 차라리 냉방이 되는 학교에 머무를 수 밖에 없지만 학교 또한 4시반에 문을 닫기에 그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보도
- 갈수록 더위에 대한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지난해 에너지재단은 자가이면서 6평이하의 가구에 에어컨 보급사업을 시행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사회복지사들의 평가를 받게됨
- 에어컨이 보급되었지만 전기료 부담으로 실제 사용이 어려운 현실로 전기료 지원 병행 필요가 제기됨
- 구조적으로 설치가 안되거나 임대인 경우 선풍기만으로 생활해야만 함. 과연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을 수 있는가

○ 난방

- 도심은 도시가스라 상대적으로 난방비 부담이 덜 하지만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시골지역이나 외곽지역은 연탄과 석유 난방밖에 사용할 수 없음.
- 따뜻한 정을 나누는 연탄나누기 행사는 그럴싸 해 보이지만 기후위기적 상황에서 대안적 해결방안이 아님.
- 석유난방 또한 치솟는 물가에 감당할 수위를 넘어섰음. 지난해 11월 1드럼 17만원하던 석유는 30만원대를 하고 있기에 감당 수준이 넘어섬
- 고유가로 전기료 또한 인상되어 가고 있기에 전열기를 통한 난방 또한 어려움 가중
- 자동차를 위한 유가 하향정책을 사용하면서 왜 난방유에 대한 정책은 없는가?

3. 생계비등 정부정책의 문제

- 정부에서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정책으로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법정 차상위 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이 대상이 되는 정책으로 1인가구 기준 40만원을 지급함.
- 문제는 사용기한이 하반기 6개월 한정으로 되어 있기에 40만원을 매월 균등하게 나누어 쓴다면 66천원꼴임. 당장 긴급한 한두가지 문제는 해결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 오르는 물가상승 정국에서 과연 버틸 수 있는 정책일까
- 이전에 발표된 긴급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와 이후에 발표된 긴급복지제도 확대는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 지원금의 문제와 일회성 지급이라는 한계를 넘어 서기 힘들.

4. 위 현실에 대한 정부의 대응문제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3고시대에 적절한 정책을 찾기 힘들
- 그럼 민선 8기 지방정부는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 이렇다할 정책을 찾아 보기 힘들.
- 제주도의 경우 3고시대 도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발빠르게 지역화폐를 통한 전 도민 10만원 지원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음과는 비교
- 다 아시겠지만 충북과 청주는 지금까지 코로나기를 지난 지금까지 도민과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제대로 준 내용이 없음
-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회의나 조사활동이 있다고 언급한 내용조차 찾을 수 없음.

• 무얼 할 수 있을까?

- 국가 정책의 기대와 별도로 지역단위 정책을 만들어 가야함.
- 이를 위해 당장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민관협력의 대응방안 논의를 시작해야함.
-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대안들을 고민하고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임.
 - 예1) 먹거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정 수급권자와 함께 비수급빈곤층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는 건 강보험료 지원대상 고려 가능)에 대한 지역화폐를 통한 매월 상당액 (30만원수준. 1일 만원 수준)의 식품지원금 지원. 이는 고물가 현상이 잦아 들때까지 유지해야 정책의 실효성 높일 수 있을 것임.
 - 예2) 냉방비 문제는 궁극적으로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상향사업을 통해 냉난방등이 구비된 안정된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요구. 이를 위해 내외 충북과 청주 자체 주거복지브랜드를 만들어 주거제공 (충남 자체 주거복지브랜드 '더행복한 주택')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설치가구에 대한 혹서기 제한된 냉방전기료를 지원, 에어컨이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선풍기보다 효율이 좋은 서큘레이터나 냉방용침구류 등등을 주거 환경에 따른 맞춤형으로 개발과 지원
 - 예3) 난방의 경우 도시가스 보급이 가능한 지역은 도시가스 보급계획을 수립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연탄은 효율이 좋은 석유난방으로 교체하고 기존 석유난로 역시 효율검사를 통한 효율성 좋은 기능으로 교체. 그런후 혹한기 한시적으로 고물가와 관계 없이 면세유 같은 정책이나 고물가전 대비 차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 가능. (1드럼에 17만원이라면 그에 대한 차액을 지원하는 방안 등)
 - 예4) 생계비는 말그대로 생존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임. 비현실적 중위소득 산정에 따른 비현실적 생계급여 지급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가구원수 대비 추가급여를 지급하고 장기적으로는 충북형, 청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위기에 대한 극복시스템을 고려 가능.

● 어떻게 만들어 갈것인가?

1. 민관협력 논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 관은 정보와 재정을 민은 현실적 문제와 대안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조속한 시일에 지방정부 수장이 위원장이 되는 협력논의체계를 만들어야함. 상시적 운영체계 또한 중요한 작동원리임.
- * 장기적으로는 충북도에 민관협치 관련 조례가 제정 되어 향후 여러 현안들에 대한 민관협치를 기반으로 민관협력 문화가 생성되어야함.
(민관협치조례가 제정 운영된 지방정부 : 경기 / 서울 / 울산 / 부산 / 인천 / 제주 / 충남)

2. 현실을 파악해야 한다.

- 각 부문별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나 대상들을 발굴하고 중앙정부의 획일화된 정책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기 위한 심층 조사가 필요함.
- 충북연구원, 각 대학 연구인력, 각 분야 전문인력 등등을 총동원하여 사람을 살려야 함.

3. 지방자치에 맞는 현실적 대안들을 논의하고 만들어야 한다.

- 과한 요구가 아닌 현실이기에 충분히 각자의 입장을 오픈한 상황에서 대안들을 만들어야함.
- 이는 단순히 지방정부에게 돈을 지출하라 하는 선만이 아니라 지역내 자원을 총동원하여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만들자는 의미임.
- 예로, 앞서 언급한 ‘재가노인 식사돌봄’ 을 해결하기 위해
 - ▲1차로 건보와 보건소를 통해서 대상자의 영양상태, 병력들을 통한 대상자와 맞춤형 식사 욕구 파악
 - ▲2차로 맞춤형식사 제공을 위한 서비스기관 지정, 협력체계 구축
(로컬푸드와 잉여농산물을 통한 공급, 산단내 먹거리제공기관 기부(원가), 식품가공업체등을 통한 재료와 음식을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을 통해 포장 배달 가능)
 - ▲3차로 위 시스템에 대한 연동체계를 구체적으로 만들고 향후 노인 포함 전 세대계층(영양식과 급식이 필요한)에 확대함으로써 충북형 건강먹거리안전망 구축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참고. 부산진구 커뮤니티키친 등)

4. 평가와 모니터링을 꾸준히 진행한다.

- 처음부터 정답같은 정책은 없음. 시대와 욕구의 변화에 맞는 정책들을 만들어 가기 위한 꾸준한 고민과 행동, 평가가 정책의 건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5. 임하는 자세로 안된다가 아닌 “된다” 정신으로 노력해야 한다.

- 관은 늘 뒷 때문에 안된다는 말들을 많이 해왔음. 이제는 민선 8기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 정신으로 되게 하는 정신과 행동이 요구

[자료제공]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

송진섭 센터장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

2022.07.25.(月).

취약계층 금융지원업무

□ 센터설립

- 2014. 11. 10. 조례 제2817호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2015. 3. 6. 센터개소
- 2016. 6. 20. 조례 제 2987호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 한시운영에 대한 부칙 제2조 삭제
 - 제2조 3항 운영인원 3명에서 6명 이내로 개정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15. 3. ~ 지속
- 운영방법: 민간위탁
- 근무인원: 6명[센터장, 상담사 5명(팀장1명 포함)]
- 위 치: 성남시청(동관 9층)
- 주요업무: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 빚 공포에 억눌려 있는 채무취약계층의 정상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재무상담 및 재무관리·신용관리 교육
 -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상담, 업무처리 지원
 - 채무조정 접수 패스트트랙 처리 지원
 - 전담재판부 마련 신속처리 진행
 - 대부업 추심 독촉으로부터 채무자 보호
 - 변호사 등 채무자 대리인 연계
 -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및 접수 지원
 - 관내경찰서 수사과 연계
 - 복지연계 및 금융복지상담 및 교육서비스 제공
 - 자활, 일자리, 무한돌봄, 노인, 청년, 청소년, 장애인, 이동노동자, 중독관리, 다문화, 정신건강관리, 간강가정지원, 임대주택관리기관 등 관내 모든 유관기관 연계
- 운영예산: 389,418천원(2022년 예산)

□ 운영방침

- 기본 및 심층 상담강화
- 유관기관 네트워킹 강화
 협약기관-유관기관-공공기관(市 유관 부서 및 행정복지센터)
- 채널 운영의 다양화 및 유연성 확보
- 홍보강화

□ 추진실적(개소~2021년 말 기준)

- 총이용인원: 52,346명

구분	운영 내용						비고
	합계	상담	채무조정 (법원접수)	채무자 대리인제	시민교육	찾아가는 금융복지상담	
합계	52,346	27,780	1,328	211	22,420	607	
2015	4,788	2,909	155	74	1,650	0	
2016	9,672	4,238	230	75	4,971	158	
2017	11,420	4,947	161	31	6,078	203	
2018	8,290	4,016	100	21	4,050	103	
2019	8,879	3,757	140	6	4,902	74	
2020	3,900	3,259	227	2	404	8	
2021	5,397	4,654	315	2	365	61	

□ 상담데이터분석

- 기초 정보 요약

- 상담 건수

- 총 상담 건수: 전년 동기대비 1,397건 증가 (전년대비 142.4%)
- 신규 상담 건수: 전년동기 대비 426건 증가 (전년대비 138.9%)
- 재상담 건수: 전년동기 대비 971건 증가 (전년대비 144.1%)

- 신규 상담

- 지역별(구): 수정구 > 중원구 > 분당구순
- 신청동기별: 채무조정(60.9%) > 금융정보(34.3%)
- 성 별: 남성(58.8%) > 여성(41.2%)
- 나 이 별: 50대(31.4%) > 60대(23.3%) > 40대(21.4%) 순
- 복지수급별: 기초수급자> 차상위 > 한부모 > 장애인 > 기초연금 > 긴급지원 순
- 유입경로별: 복지기관, 지인 연계를 통한 상담 인입 증가폭 두드러지고 인터넷채널 확대 늘어남

○ 분석

• 상담건수의 증가

-초기 상담 이후 시간이 경과에 따라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생각할수 있음(경제적 어려움 확대에 따른 상담 증가)

: 코로나19 여파로 수요 계속 증가 예상

• 신청동기 관련 금융정보 관련 비율이 올라간 이유

-경기극저신용대출 사업 참여에 따른 증가(2020년 채무조정상담 비율 87.85%)



• 20, 30, 40대가 전년 대비 꾸준히 증가, 이는 주요 경제주체의 가계경제 또한

악화되어 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음(이 추세는 계속되어 수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상담 유입경로의 고른 분포: 홍보채널에 대한 보완 및 꾸준한 활동에 기인한 결과

-특이사항으로 복지기관과 지인을 통한 유입이 많아지는 이유로 사회적 필요에 따른

이슈와 함께 센터에 대한 인지도 확대 및 도움받은 시민들의 소개 확대에 따른 결과

□ 자원망 구축 현황(지역, 민·관)

○ 업무협약: 종합사회복지관 등 약 50여 개 기관

○ 유관기관: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전국 금융복지상담센터, 사단법인 롤링주빌리,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경기복지재단, 경기일자리재단, 고령사회고용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약 20여 개 기관

○ 사회서비스 연계기관: 정신건강,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 및 상담지원, 생계비 지원 등 약 90여 개 기관

○ 민관 기관 연계 활동관내 민·관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사회경제적 취약층 대상 금융복지상담 및 교육업무 지원

• 民: 종합사회복지관, 자활, 지역금융, 지역의료, 이동노동자, 소상공인, 정신건강(자살예방), 장애인, 중독관리, 도박문제, 청년, 청소년, 아동, 여성, 노인, 학교, 다문화, 북한탈북자, 임대주택관리 등 관련기관 전체

• 官: 행정복지센터, 지역경제과, 청년정책과, 복지정책과, 평생교육과, 하천관리과, 무한돌봄 등

[발제/토론문]

□ 서민금융복지지원

- 가계부채의 양적팽창 및 질적 악화되는 상황에서 생계형 연체자들을 구제(지원)할 만한 프로그램 필요 대두
 - 사회적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의 불균형 해소 및 지원 방안 필요
 - 채무조정제도 및 법적절차 이용이 어려운 저학력, 고령,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조금 더 친화적인 접근기회 부여를 통해 사회적 복지 서비스 정보 접근의 불균형 해소 및 실질적 접근성 확대 필요
 - : 서민금융 공급체계 구축을 통해 저신용,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공공성 강화방안 필요
 - 채무자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새출발 지원제도 필요
 - : 조정제도 외에도 불법사금융 신고, 채무조정협상, 채무자대리인제도 지원, 수급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채무조정 외 복지자원연계 재무상담서비스, 신용관리서비스 등 가계재무구조 개선 및 금융이슈에 대한 예방적 접근 필요
 - 채무문제에 대한 구제라기 보다 금융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편적 복지 관점에서 접근 필요
 - : 채무, 재무, 신용관리 등 통합적 내용을 바탕으로 일자리, 일반복지, 주거 등 다양한 사회자원과 연계하여 원스톱 종합복지 상담서비스로 확대하여 위기가정의 실질적 새출발(재기)지원
- 의미
 - 대시민(도민) 서비스로서의 금융복지상담
 -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지자체 중심의 복지 선도 역할
- 역할
 - 의회(의원) 역할
 - 취약계층의 심각한 경제상황과 채무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이에 대한 정책 제언을 통해 금융복지상담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정책적 추진을 하는 '추진자' 역할
 -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역할
 - 현장에서 취약계층 대면상담을 통해 취약계층의 채무문제 현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채무구제 제도가 '경제적 갱생, 자립 지원'이라는 본연의 목적과 역할을 달성하도록 하는 '전문 조력자' 역할

□ 기존 채무조정 기관과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차별점

[기관 별 주요업무 차이 및 관계]

- 신용회복위원회: 공, 사적 채무 조정제도 지원/ 채무 조정을 통한 채권 회수 조정
 - 금융복지상담센터와의 관계
 - 사적 채무조정에 대한 조력(업무 연계)

-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적채무조정업무 지원
 - 금융복지상담센터와의 관계
 - 공적채무조정업무에 대한 조력
 - 공단 업무의 종속적 역할에 대한 우려 시선
 - 법률사무소와의 업무 영역 중복 이슈
 - 대상자 선정의 한계: 주로, 재기지원 목적의 취약층 대상(사회취약층 위주)

- 금융복지상담센터: 공,사적 채무조정 제도의 상담 및 지원, 재무상담 등 가정경제 상담, 채권사와의 직접 협상, 복지기관 및 유관기관 연계 지원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차별화 영역]

- 심리적 안정(라포 형성)을 통한 재기지원 강화
 - 업무(사무)적 접근에 앞서 관계적 접근(라포형성)을 통한 문제해결에 대한 접근성 확대
 - 소비자 우호적 상담
 - : 채무문제는 단순히 신용상 문제라기 보다 소득과 상환능력의 문제인 경우가 많음
따라서, 일자리, 복지, 주거 등 다양한 사회자원의 활용을 병행한 종합상담 연계 필요
 - 내담자의 경제적 상황의 개선여부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 : 일자리, 복지자원 연계 후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 이를 반영한 재정상태 변화 체크(지속적 재무관리 훈련이 사후 계속 필요)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 장기 채무변제 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접근성을 통해 자립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지원
결국, 경제적 갱생과 자립지원을 통해 사회로의 복귀 및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

- 다양한 지원 방안 모색
 - 긴급구호, 위기지원(관련 기관 연계), 복지적 관점의 채무상담, 돌봄지원, 복지연계
 - 민생침해 및 사회적 이슈 문제 상담

-불법사금융 및 금융사기 피해자 상담 지원

- 찾아가는 금융복지 상담

-연계 기관 방문 상담 지원

- 대시민 교육(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부채탈출 교육

빛으로 고통받는 시민에게 상황에 적합한 조정제도 안내 및 조정제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설명, 오래된 채무 찾기, 압류 통장 해결법, 채무독촉으로 보호 받는 법,

-금융사기피해예방 교육

금융환경 변화, 금융사기 사례, 예방 및 대응

-통장관리

돈에 대한 철학, 현금흐름 개선, 통장시스템(쪼개기)

-신용관리, 보험관리 등 금융교육

- 무료서비스 지원

-경제적, 사회적 재기가 필요한 대상에 대한 파산면책 무료지원

- 채권사, 추심사의 부채관리 및 불법추심 등에 대한 공적, 사적 문제 제기 및 정책제안
- 추심법 및 추심 가이드라인 미준수 문제 이슈화(불법, 과대 추심에 대한 대응)
- 금융 취약계층 및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발굴(금융복지 사각지대 발굴)
- 유관기관 연계, 찾아가는 금융복지상담 등
- 시민강사 제도 운영을 통한 대시민 금융복지 관련 교육 확대
- 다양한 사례 확보를 통한 서민금융 방향에 대한 정책제안

-상담 분석자료 생산 및 정책 제안

○ 나아가야 할 방향

- 금융자원의 불공정한 분배 심화에 따른 제도권 금융배제 및 금융접근성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저소득 시민(도민)을 위한 맞춤형 서민금융서비스 제공하는 금융복지상담 센터(전담기관) 설치 필요

-지자체의 재정지원 및 조례 제정을 통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제도화)

- 신용, 저소득자들의 자산 및 소득불평등 개선하고 자신의 생애주기 계획과 노후 안정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자산형성 지원사업 필요
- 채무조정상담 초기단계 부터 채무변제 이행을 성실히 행하는 채무자들에게 일정기준

의 상환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융대출 외 재무 목적별 자산형성지원을 결합시킴으로 경제적 자립을 위한 노동의지 강화와 미래에 대한 생애 계획을 통한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이룰 수 있는 적극적 금융복지정책 개발 필요

- 관내 민·관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사회·경제적 취약층 대상 상담 및 교육업무 지원 (학교 포함)

○ 제언

- 시(도) 단위의 기획과 시행 주체의 상호연계

-ESG측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혜택 받을 '환경(E)'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역할(S)'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고, 이를 통해 '민·관(G)연계'를 통한 '범용적 사회복지 지원서비스'로 개발(확대)

-일자리측면: 사회적역할과 의미부여가 가능한 기관

상담사로서 자기 직무에 대한 보람과 가치가 크게 부여되는 일자리

단순 일자리 서비스가 아닌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일자리 서비스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둔 일자리 창출

(사회적 경제, 복지적 경제로서의 사회 기여형 일자리 창출 효과)

- 지역 복지 플랫폼 내 포함을 통해 사회적 복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부여

-왜 충북(청주) 사람은 혜택을 못보나?

: 충북(청주) 도·시민에도 형편에 맞는 구제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보편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 부여(소외사랑)

충북의 건강안보, 현황과 대책

2022. 7. 22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CHUNGCHONGBUKDO PUBLIC HEALTH POLICY INSTITUTE

1.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돌아본 건강안보

- 21세기에 들어서며 인류는 사스(2003), 신종플루(2009), 메르스(2015) 등 다양한 감염병을 경험 하였지만, 다행스럽게도 과학기술과 공중보건의 발전을 통해 공중보건위기 대응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비교적 단기간에 이러한 위기를 통제할 수 있었다.¹⁾ 그러나 2019년 12월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은 현재까지도 변이를 일으키며 전 세계적으로 약 5.65 억 명의 확진자와 637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2022년 7월 19일 기준)하는 등 개인 수준의 건강문 제를 넘어 국민건강 및 국가적 차원의 보건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정치와 경제, 사회, 환경, 외교 등의 이슈에 영향을 끼치면서 각 국가의 안보를 논할 정도로 큰 위협으로 부상하였 다.
-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질병은 인간안보(human security), 그 중 보건안보(health security)의 개념으로 해석되어왔다. 그동안 인간안보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 는 개념의 전통적 안보와는 달리 개인적 차원의 성격이 강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는데, 코로 나19 사태로 인해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 1994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보고서 1994'에서 인간안보의 개념에 대해 처음으 로 제시하였는데, 기존에 통용되던 무력으로 국토를 지킨다는 전통적인 안보의 개념을 넘어서 인간을 지킨다는 새로운 안보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 인간안보는 건강, 경제, 식량, 환경, 개인, 공동체, 경제안보 7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팬 데믹을 경험하며 7가지 안보의 요인이 같은 위상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 건강안보가 다른 6가지 안보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안보가 핵심적인 요인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 건강안보가 인간안보의 핵심으로 자리를 잡게 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사회구조의 변 화이다.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같은 사회구조의 변화는 사회적 대응력을 약 화시키고 취약계층의 확대되는 결과를 불러와 취약계층의 건강안보를 위협한다.
- 두 번째 거버넌스의 부재이다. 중요 위기와 재난에 대응하는 거버넌스가 취약하게 되면 전체 적인 사회의 대응력을 약화시키고 재난을 크게 만드는 결과를 불러온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보면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찾아볼 수 있는데, 위기와 재난 대응에 필수적인 공공자원 특히 공공 의료를 확보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부족했던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 코로나19와 같이 건강안보를 위협하는 감염병의 출현 주기는 점차 짧아지고 있다. 이런 위험 요인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취약계층은 더 큰 피해를 입을 것 이며, 취약계층의 건강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

1) 김창보. 인간안보 관점에서 본 코로나19 특징과 건강정책의 방향. 대한공공의학회지 2021;5(1):e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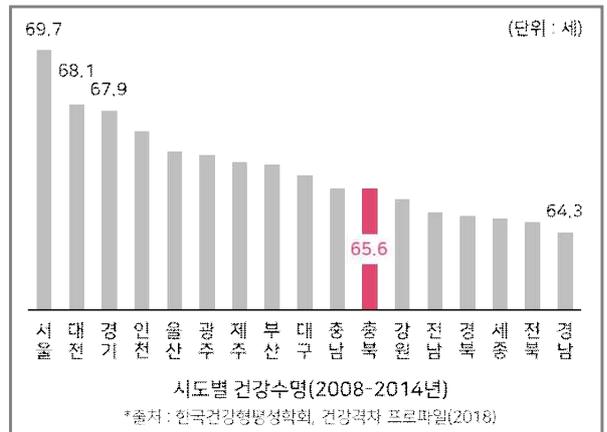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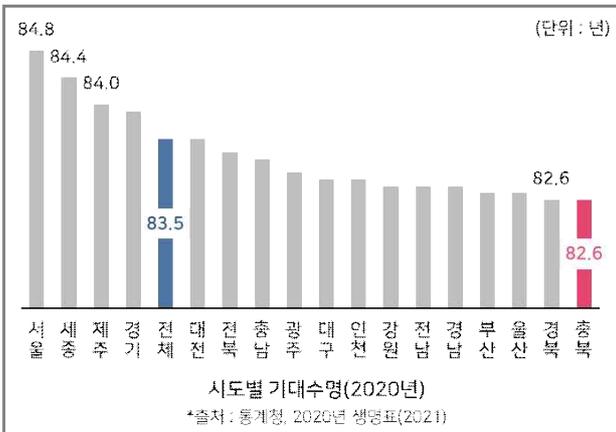
2. 충북의 건강안보 현황

가. 수명 및 사망 관련 지표

- 그동안 충북의 각종 건강지표는 전국에서도 최하위 수준으로 열악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 면적당(km²) 상급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수 등의 지역 주요 의료 자원 지표에서도 전국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인구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이자, 지역별 보건 의료 여건의 차이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 수명 및 사망 관련 지표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1) 기대수명

- 기대수명(life expectancy)은 특정 연도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를 나타내며 ‘평균수명’이라고도 한다.²⁾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충북의 기대수명은 82.6년으로 경북과 함께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고, 전국 수치(83.5년)에 비해서는 약 0.9년,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서울(84.8년)에 비해서는 약 2.2년의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시군구 간에 더 큰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국에서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시군구 지역과 충북 내에서 기대수명이 가장 낮은 시군구 지역의 격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2) 건강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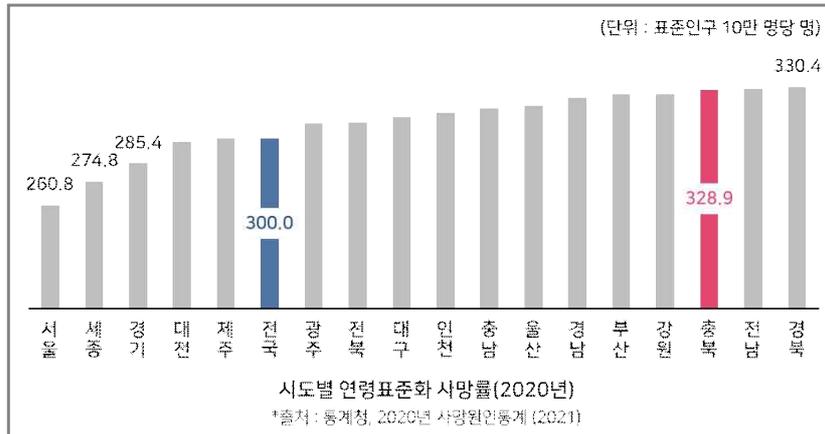
- 기대수명이 양적인 측면에서 건강수준을 대표하는 지표라면, 건강수명(healthy life expectancy)은 건강의 질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지표로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사고로 원활히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을 뺀 나머지 수명을 의미한다.³⁾ 한국건강형평성학회에서 보고한 건강격차 프로파일(2018)에 의하면 충북의 건강수명은 65.6세로 17개 광역시도 중 열 번째로 낮았고, 건강수명이 가장 높은 서울과는 4.1년의 차이를 보여 기대수명보다 건강수명에서 시도 간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 간 격차는 충북 시군구 내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며 충북에서 건강수명이 가장 높은 청주시는 67.5세로 252개 시군구 중 69위를, 가장 낮은 음성군(은 64.0세)과 증평군(63.6세)은 각각 212위와 225위로 기록했다.

2) 통계청, 2020년 생명표(2021).

3) 국민삶의질지표>건강>건강수명[통계청 국가지표체계]. (2020.06.20.).URL: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5067>

3) 연령표준화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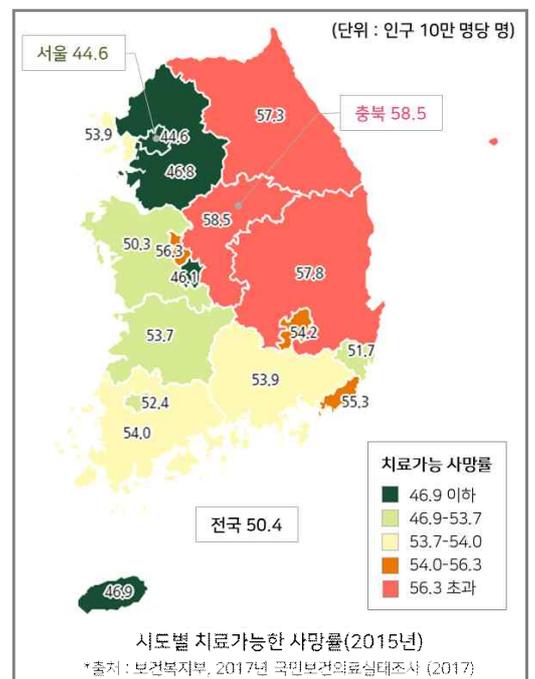
- 지역 및 연도별 인구의 연령구조의 차이를 표준화한 연령표준화 사망률(age-standardized death rate)⁴⁾의 경우 충북은 표준인구 10만 명당 328.9명(2020년)으로 17개 광역시도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국 수치(300.0명)에 비해서는 인구 10만 명당 약 28.9명, 사망률이 가장 낮은 서울(260.8명)에 비해서는 인구 10만 명당 68.1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충북 14개 시군구의 표준화 사망률은 청주시 서원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전국 수치보다 높은 사망 수준을 보였다. 청주시 서원구는 인구 10만 명당 299.5명으로 사망률이 가장 낮았고, 보은군은 396.1명으로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였는데, 보은군과 청주시 서원구의 표준화사망률 차이는 인구 10만 명당 96.6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망원인별 연령표준화 사망률에서 충북은 우리나라 인구의 사망원인 1위인 악성신생물(암)에 의한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93.7명으로 부산(96.1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사망 수준을 보였다. 뇌혈관 질환에 의한 표준화 사망률 역시 23.4명으로 울산(25.2명), 부산(24.2명)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사망률을 보였다.

4) 치료가능 사망률

- 치료가능 사망(amenable mortality)은 현재의 의료적 지식과 기술을 고려했을 때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통해 피할 수 있는 원인에 의한 사망으로, 보건 의료 체계의 성과 평가 관점에서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기 사망을 의미한다.⁵⁾ 전국의 2015년 치료가능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50.4명이고 서울(44.6명)이 가장 낮은 사망률을 보였다. 충북은 인구 10만 명당 58.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가장 낮은 서울과 비교해 인구 10만 명당 13.9명의 치료가능 사망이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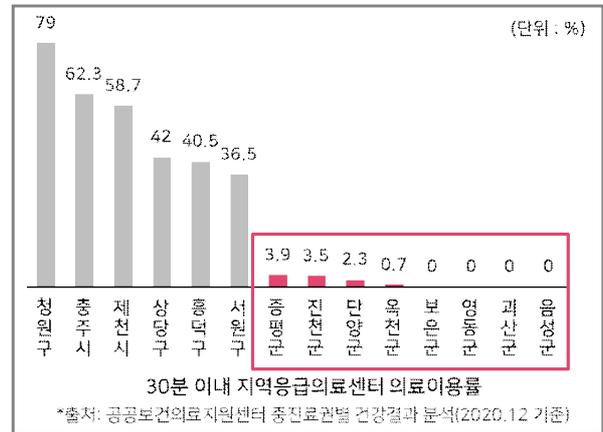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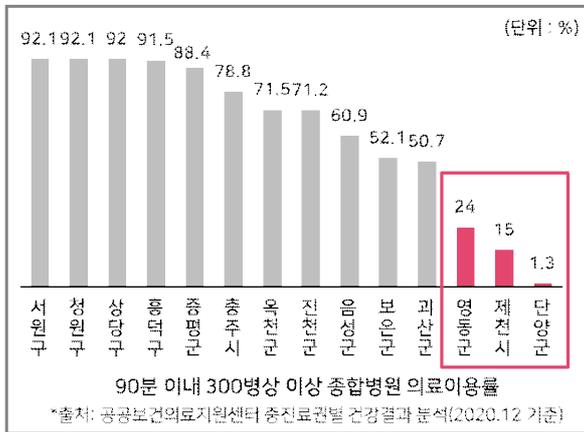


4) 통계청, 「2020년 사망원인통계 결과」(2021).

5)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민보건 의료실태조사 결과보고서」(2017).

나. 의료접근성 및 의료취약지 현황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의료취약지의 지정·고시)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충북의 행정구역 11개 시·군 중 8개 시·군(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진천군, 충주시)이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로 지정 고시되었을⁶⁾ 정도로 의료취약지역이며, 지역 간 의료접근성에 큰 격차가 존재한다.
- 예를 들면, 중등증 이상의 급성기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90분 이내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이 청주시의 경우 90% 이상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은군과 괴산군의 경우는 50% 정도 수준이며, 영동군은 24%, 북부권인 제천시와 단양군은 각각 15%와 1.3%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 30분 이내 지역응급의료센터 의료이용률로 보면 지역 간 의료격차는 더 커진다.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를 제외하곤 응급상황에서 최소한의 진료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지역이 대부분이다. 대부분의 충북지역 주민이 적정시간 내에 응급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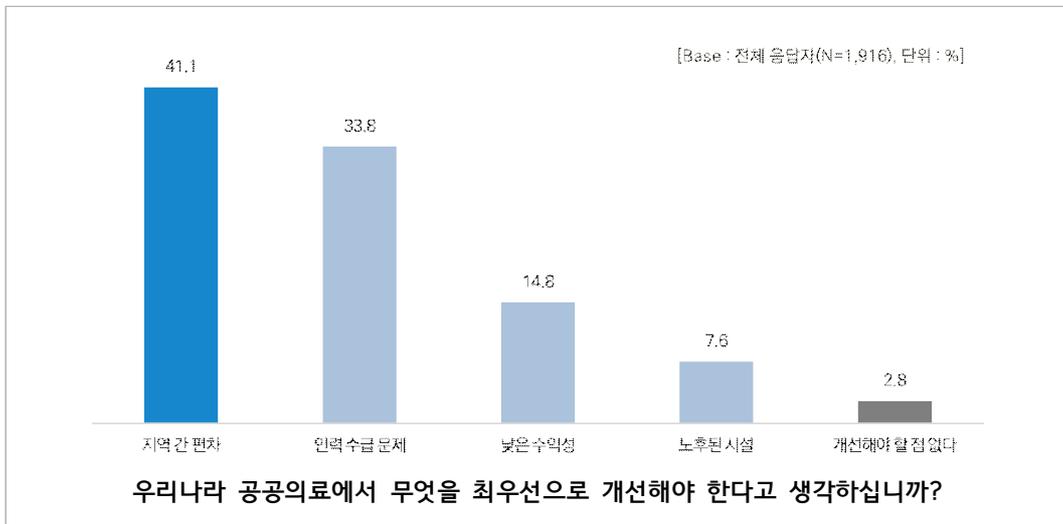


다. 공공보건의료 인식에 대한 충북 도민 대상 실태조사 결과

-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보건의료정책 및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충북도민의 인식 및 신뢰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충북도민 19세 이상 성인 1,916명을 대상으로 「충북도민의 공공보건의료 인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⁷⁾
- 조사결과, 우리나라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은 전체 응답자의 86.7%가 '긍정적' 또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공공성, 형평성, 접근성, 보장성 등의 6개 항목별 평가에서는 '공공성을 갖추고 있다'에 전체 응답자의 89.5%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과 달리,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다'에 대해서는 63.8%, '지역 간 차이 없이 제공된다'에 대해서는 58.6% 만이 '대체로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평가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수준을 보였다.
- 충북도민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에서 최우선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역 간 편차'를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인력 수급 문제', '낮은 수익성' 등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90.2%가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6호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https://www.law.go.kr/행정규칙/응급의료분야의료취약지지정/\(2021-306,20211213\)](https://www.law.go.kr/행정규칙/응급의료분야의료취약지지정/(2021-306,20211213))

7)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충북도민의 공공보건의료 인식에 대한 실태조사」(2022).



-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정책 및 기능 수행에 대한 충청도민의 신뢰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65 점, 충청북도의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충청북도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평균 7.48점,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충북대학교병원에 대한 평가는 평균 7.50점으로 모두 중간점을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대체로 적극적인 긍정보다는 만족에 가까운 긍정이나 중립적인 인식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체계에 대해서는 응급실 및 중환자실이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높았으며, 충청도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수혜 확대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대책으로는 '공공보건의료시설 확충'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98.8%가 충청북도에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지역 공공의료기관 인프라 강화에 대한 충청도민의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충북의 건강안보 강화를 위한 대책

가.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

- 공공의료 관점에서 주목하는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과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 필수·지역의료 강화, 중증정신질환 관리가 있다.
- 재난적 의료비는 의료비가 소득 또는 가구 지출로 측정되는 지불능력의 일정 비율을 넘어서는 경우로 정의되는데, WHO⁸⁾는 연간 가구소득의 4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한 경우를 재난적 의료비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높은 상대적으로 비급여항목이 많고 치료 기간이 긴 중증질환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정책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가계 부담과 재난적 의료비 경험률을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⁹⁾은 65.3%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인 80%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은 가구의 빈곤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개인

8) World Health Organization. Distribution of health payment and catastrophic expenditures methodology: discussion paper no. 2-2005.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5.

9)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urvey on medical expenses for health insurance patients in 2020.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2021. / Lee OH, Park KH, Kim JH, Yeo HK, Baek JA, Kim MJ, et al. Survey on the benefit coverage rat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2019. Wonju: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20.

의 건강수준과 삶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재난적 의료비 경험 비율¹⁰⁾은 4.6%로 OECD 평균인 1.6%에 비해 2.9배 높다.

- 의료비 지원은 1단계는 비급여의 급여화, 2단계는 본인부담 상한제, 3단계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1단계인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펼쳤다면 윤석열 정부는 3단계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정책을 택하였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전체 국민이 아닌 일부 국민을 대상을 하지만 재원이 비급여의 급여화보다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 이를 위해 재난적 의료비의 재원이 되는 전년도 보험 수입의 1/1000의 상한선을 1/100로 점진적으로 향상하고, 현재 6대 중증질환으로 제한하고 있는 의료진료비를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의료비 부담액이 가구의 연 소득 대비 15% 초과 시 지원을 10% 초과로 변경하며, 연간 지원 한도 3,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나. 충북 건강안보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 충북이 타 시도에 비해 수명 및 사망 관련 지표가 좋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충북 시군구 내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크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시도 및 충북 시군구 지역 간 건강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 중 하나는 필수의료 포함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의료 자원이 충북 내에서 청주시를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에 편중된 문제가 크다.
- 또한 의료취약지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온 결과로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지역이다. 그렇다고 갈수록 고령화와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대로 방치한다면 치료가 가능 사망률 격차 심화, 급성기 진료를 시간 내 받지 못해 발생하는 합병증 등으로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다.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아 필요한 의료제공이 어려운 의료취약지 발생과 같은 대표적인 시장실패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정부의 개입으로 의료인프라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따라서 충북의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을 보장하고 수명 및 사망지표 등의 지역 간 건강격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실현가능한 '보건의료 자원(인력, 시설, 장비)의 균형적·효율적 배치'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 지금 전 세계는 유례없는 고금리, 고물가 시대로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 문제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재난적 의료비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추어 충청북도 또한 관련 대책이 필요한데, 새로 출범한 충청북도 민선 8기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착한은행 설립을 통한 진료비 후불제가 잘 정착한다면 충북도민의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계층에 상관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10) Wagstaff A et al. Progress on catastrophic health spending in 133 counties: a ret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 Lancet Global Health 2018; 6: e169-79 OECD. OECD Health Data. 2021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의원

· 의 원 정 책 자 료 조 사 ·

3고시대,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충청북도의 정책방향 제시

2022.07



충청북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이미 사회 곳곳에서는 위기를 알리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 '22년 6월기준 전년대비 충북의 물가 상승률은 6.7%를 기록하였음 이는 전국 6%를 상회하는 수치로서, '08. 7월(6.8%)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라고 할 수 있으며, 농축산물, 가공식품, 외식 물가에 이르기 까지 안 오른 품목을 찾기 어려울 만큼 거침없는 물가 상승세는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고유가, 고금리 등에 따라 서민경제에 오는 충격은 말할 수 없이 큰 상황임
- 충북의 경우 '22년 1월부터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대책 상황실 및 물가대책 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물가를 관리해왔음

<충청북도 물가안정 추진상황>

□ **우리도 추진상황**(1月~)

- ① 물가대책 상황실 운영 : 도 사회적경제과, 시·군 경제부서 內 설치
- ② 물가대책 위원회 개최(5.18.) : 15명(물가대책위원 10명, 공공요금관리 부서장 등)
- ③ 물가대책실무회의 운영(월1회) : 11명(농축수산물, 개인서비스, 공공요금 분야 실무 팀장)
- ④ 합동점검반 운영 : 도·시군 16개반 64명
- ⑤ 물가책임관제 운영 : 도 시군담당 실·국장(시·군 물가점검,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
- ⑥ 물가모니터단 운영 : 105명(도 15명, 시·군 90명), 서민 밀착형 품목 물가점검
- ⑦ 충북형 공공배달앱(떡깨비) 운영 : 지역화폐 연동 등 착한 소비운동으로 확산 전개
- ⑧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308개소) : 버스광고 및 SNS 활용 홍보 추진
- 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 지역 내 소비진작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 ⑩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 : 상인회·민간단체 등 물가안정 홍보 313회, 간담회 43회

□ **하반기 물가관리 계획**

- ① 공공요금 : 택시요금 동결, 상수도요금 감면 독려
- ① 물가관리 : 착한가격업소 경영안정자금 지원, 휴가철 물가대책 추진, 물가합동점검반 및 모니터링단 운영, 외식업협회충북지회 등 직능단체 대상 물가안정 동참 협조

- 그러나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서는 모니터링 및 홍보, 소비독려 등의 물가안정 대책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의 추진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 최근 성일홍 경제부지사는 7월 18일 개최한 확대간부회의에서 도민들에게 고인플레이션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민생안정 종합대책마련을 주문한 바 있음
- 그러나 부산광역시(7.14), 전남도(7.21), 경북도(7.18) 등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긴급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을 지원할 것을 발표하였음
-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부담을 줄여주는 등 생계가 막막해진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민생안정 대책은 수립이 늦어질수록 서민과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빠질 수 밖에 없어 선제적인 지방정부의 대응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대책수립을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음
- 타 지자체의 민생안정 대책을 살펴보면, 전남의 경우 △중소기업소상공인 재정안전망 구축 △농수축산물 가격안정 및 농어가 경영부담 완화 △취약계층의 복지 지원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 경북도의 경우 △취약계층 지원강화(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고용안정망 확충) △서민 식료품비 부담경감(축산물, 농산물, 수산물, 식품원료) △기타 생계비 부담완화(유류비, 주거비, 통신비) 등을
- 부산광역시의 경우 △물가안정 △기업경영부담 완화 △취약계층 안정망 강화 △소비촉진 판로확대 △경제규제혁신 등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음
- 각지자체의 민생안정 대책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크게 △물가

안정 대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 △취약계층 지원 대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었음

- 물가안정 대책의 경우 농축산물의 가격안정화 및 각종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었으며,
-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안정화자금 지원 및 금융지원 등의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경우 영업수익을 개선하기 위한 판로 확대 방안과 경영부담 감소를 위한 대책 등이 마련되어 있었음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등을 대상으로 생계와 직결되는 비용과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여짐
- 민생안정 대책 중에 눈에 띄는 부분으로는 전남도의 경우 면세유 인상액의 50%를 지원할 것을 민생안정 대책에 반영한 것으로,
- 중앙정부에서는 '22년 5월 30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는데,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 ① 생활·밥상물가 안정
 - ① (수입원가 절감) 돼지고기·식용유·커피 등을 비롯한 수입품 원가상승 압력 완화
 - ② (식료품비 인하) 김치·장류 등 부가가치세 면제 및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 ③ (식재료비 경감) 밀가루 가격·비료 매입비 지원 및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 ② 생계비 부담 경감
 - ④ (교육비 절감) 2학기 학자금 대출 저금리 동결 등으로 교육비 부담 완화
 - ⑤ (교통·통신비 인하)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및 5G 중간요금제 출시 유도
 - ⑥ (이자부담 완화) 안심전환대출 도입 및 저금리 소액대출 확대
 - ⑦ (취약계층 지원) 긴급생활안정지원금·긴급복지 및 에너지바우처 등 확대
- ③ 중산·서민 주거안정
 - ⑧ (보유세 완화)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재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 ⑨ (거래세 완화) 일시적 2주택자 등 취득세·양도세 중과 배제
 - ⑩ (금융접근성 제고) 생애최초주택구입 LTV 완화·DSR 장래소득 반영 확대

- 이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의 핵심 대책 중 하나인 유류세 인하와 관련하여, 교통물류 업계 및 어민을 대상으로 경유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농업분야에서 사용되는 유류비(면세유)와 관련해서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었으며 이에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는 농업인들은 2배 가까이 인상된 면세유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만 하는 상황임
- 이에 전남도에서는 국가 지원에서 제외된 부분을 고려하여 그 지역에 필요한 지원을 민생안정 대책에 포함 시킨 것으로 보여지며 이와 같이 충북도 역시 지역 상황에 맞는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임
-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3고 시대의 광역지방정부인 충청북도의 역할은,
 - 조속한 광역자자체 차원의 민생안정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며, 큰 틀에서 3가지 분야에서 대책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 ① 농축산물 및 생활 물가안정
 - ②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농업 경영안정 지원
 - ③ 취약계층 복지 지원
- 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 민생안정 추진과제와 함께 검토를 진행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 우리 충북도에서 좀 더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국가 지원에서 제외된 부분이라 하더라도 충북에서 특별히 지원을 해야될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인 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등 광역차원의 실정에 맞는 대책 수립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농축산물 및 생활 물가안정 분야**의 경우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하반기에도 고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현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요금 감면뿐만 아니라, 농축수산물 등 밥상 물가에 대한 안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장기화된 경제침체로 인한 기업의 금융부담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안정화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며, 소비의 위축에 따라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해 소비촉진 방안과 임대료 및 인건비 등 경영부담 감소 대책 등이 마련 되어야 한다고 보여짐
- 또한, 농업분야에 대한 부분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으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원천이자 식량안보의 기반인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민생안정 대책에 빼놓고 간다면 농산물 가격 상승이나 식량 생산 감소로 이어져 도민들에게 더 큰 어려움이라는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으며 이에 농업 분야에 있어서 현재 가장 큰 이슈인 유통비 지원과 비료 구입비 지원 등 농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발굴하고 지원 대책이 마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취약계층 복지 지원분야의 경우 중앙정부의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 따르면 긴급생활안정지원금, 긴급복지(생계지원금)확대, 에너지바우처, 최저신용자 금융 지원 등의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포괄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충북도에서는 정부지원분야 외에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그것을 중심으로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마지막으로 향후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충북의 경제·사회가 흔들리지 않고 작동하기 위해서 내생적 역량을 키워야 하며, 이를 위한 충북도의 장기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하며, 의회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임

[참고자료] 타 시도 민생안정 지원대책 현황 (자료 : 각 지자체 보도자료)

지역	지원대책 내용
전남도	<p>□ 중소기업소상공인 재정안전망 구축 173억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창업자 특례보증, 채무상환유예 및 만기기한 1년 연장, 공공배달앱을 통한 소상공인 영업수익 개선, 지역화폐 발행량 확대, - 조선업 분야 이주정착금, 고용유지 지원금,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 생산기술인력 양성 및 기능인력 훈련수당 지원 대상 확대 - 운수업계 분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재정지원금 80억원 지급 -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수출보험료, 담보한계 특례보증 확대, 해외 온오프라인 상설 판매장 활용 안정적 판로 확대
	<p>□ 농수축산물 가격안정 및 농어가 경영부담 완화 298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세유 인상액 50%지원 -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특별할인전,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대도시권 직거래장터 활성화 지원 등 추진 - 남도장터(jnmall.kr)를 통해 쌀 홍보 기획전 추진 - 경로당 어르신이 친환경 쌀 구입비의 차액을 지원 -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품목별 맞춤형 판촉 행사 확대, 친환경 수산물 인증비 지원 확대
	<p>□ 취약계층의 복지 지원 98억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바우처 택시를 전 시군에서 시행, 100원 택시 지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알뜰교통카드 확대 -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안정을 위해 17억 원을 추가 지원하여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지원가구를 대폭 확대 - 자가 소비 목적의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사업(5억 원) 지원대상 확대 - 관광 숙박·여행업계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관광진흥기금을 활용해 융자 지원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의 비용경감을 위해 여행활동을 지원 - 창작활동 여건 마련을 위해 창작 활동 준비금 보조
경북도	<p>□ 민생안정 추진과제 2685억원 투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지원강화(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고용안정망 확충) - 서민 식료품비 부담경감(축산물, 농산물, 수산물, 식품원료) - 기타 생계비 부담완화(유류비, 주거비, 통신비)

<p>부산시 (5대분야 10개과제 5700억원 규모)</p>	<p>□ 물가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교통요금,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7종의 공공요금 동결 - 농축산물 수급관리 및 직거래 장터 확대를 통한 가격안정 도모
	<p>□ 기업경영부담 완화 4,639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자금) △기업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2,000억 원 규모 경영안정화자금 마련 △대출자금 연장 △창업기업·법인택시·자동차 부품기업 대상 특례보증 확대 - (중소기업) △수출기업에 대한 해외 물류비 지원범위 확대 △‘부산형 스마트 공동 물류 플랫폼 을’ 구축을 통한 물류 지원 - (소상공인) △소상공인 재기 지원사업,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착한 임대인 사업 △전통시장화재공제료 지원사업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p>□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816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확대 △아동급식 단가 인상 △노인무료급식 지원단가 인상 △금융복지 △문화누리카드 및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확대 - (사회적 배려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등학생 학용품비 지원단가 인상 △보호종료 아동 자립정착금 인상 △청년지원(학자금대출이자 지원 및 신용회복 지원 등) △아동노동자 권역센터 2개소 신설 △경로당 한시적 특별운영비 신규 지원과 냉난방비·양곡비 지원 확대 - (고용지원) △공공근로 확대 △4대보험료 지원 확대 △직업훈련수당(취약계층) 인상
	<p>□ 소비촉진 판로확대 274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설립 △스타 소상공인 발굴 △유망업종 브랜드화 △골목상권 공동체조직화 △뉴라이징 골목 - (판로개척) △동백상회 운영개선 추진 △온라인 기획전(11월) 등 - (동백 플랫폼 활성화) 동백전·동백통 플랫폼 이용 확대 이벤트 개최 - (관광 프로모션) △비수기 외국인 관광활성화 △온라인여행사 연계 상품할인 - (관광 인센티브) △관광선결제 사업 확대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 (미식관광 콘텐츠화) 맛집, 양조장 등 발굴, 특화 관광콘텐츠화 및 관광연계
	<p>□ 경제규제 혁신 274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 합동 규제발굴단 확대운영 ⇒ 경제부시장, 기관장 및 전문가 등 확대 - 민생 현장과의 상시 소통 플랫폼 구축운영 ⇒기업 - 온라인 소통 플랫폼 / 소상공인 -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 원자재 가격 상승 관련,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촉구건의(기업·정부)

전세계적 경기 불황에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로의 전환

박완희 (청주시의원)

□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요인

- 에너지, 식료품 가격, 수요자 측 물가 상승 압력, 공급 병목현상, 임금 상승 압력, 주거비와 유동성 등 여러 가지 임.
- 이 가운데 특히 에너지 가격은 원유,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

□ 유가 상승 원인 : 러시아·우크라 전쟁과 국제유가

- 최근 유럽연합이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90% 줄이기로 합의
-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에너지 분야를 압박하고자 원유 가격상한제 도입을 앞두고 두 나라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는 7월 원유 판매 가격을 인상하기로 하면서 유가 인상에 한몫 함.
- 나아가 최대 석유 소비 시장인 중국이 최근 봉쇄를 풀면서 수요가 폭발함에 따라 유가 상승에 기여하고 있음. 그동안 중국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지속적인 봉쇄로 석유 수요가 감소함.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중국은 러시아산 원유를 저렴하게 수입하고 있음.
- 이런 가운데 미국에너지 정보청 EIA는 다가올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휘발유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제유가는 더욱 폭등할 것으로 전망함.

□ 중앙정부의 대책

- '22년 경제정책방향 설문 결과 경제 정상궤도 도약, 민생경제 회복을 우선순위로 제기, 성장동력보강도 주요과제로 응답.
 - 경제 정상궤도 도약을 위해서는 투자 분위기 확산과 최적의 정책조합이 필요
- 전문가들은 '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전략산업 등 미래대비 신성장 산업 및 국가전략기술 투자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
-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新양극화 대응', '고용시장 복원 및 안전망 확충'을 중점 정책으로 응답
- '고용시장 복원 및 안전망 확충'의 핵심과제로 전문가들은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확대,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등을 제시
- 성장동력 보강을 위해서는 '인재양성 등 혁신기반 조성', 'BIG3 등 유망 신산업 육성' 등이 제기

- 전문가들은 'BIG3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최우선과제로 민간기업 투자에 대한 재정 세제 지원 확대를 지목하였으며, DNA산업 육성 및 친환경차 기반 마련 등도 핵심과제로 언급

□ 청주시 상황

- 중앙 위주 지원사업이 주로 진행되며, 타 지자체와 다른 큰 차이점 없음.
 - 현재 향후 계획 미수립 (8월 이후 수립 예정)
- 그간 지원 현황
 - 청주페이, 상·하수도 월 사용료 경감, 이차지원, 방역 소독·물품 및 인건비 지원, 생활지원비 지급, 돌봄지원금, 문화·예술인 지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수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 하지 않음.)
-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증설 계획 전격 보류
 - 글로벌 불확실성에 따른 결정, 대기업 경제 편향성 극복 필요

□ 제안

-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새로운 양극화 대응, 고용시장 복원 및 안전망 확충 필요 :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확대,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등
- 단기적 방안
 - 최소 생계 유지 및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원 : 생활 안정 긴급자금 등
 - 청주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 추진
공원 관리, 생태계 관리, 하천 관리, 도시숲 관리 등 청주시에 맞는 일자리 창출
 -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적극적 지원(조례 기반), 지역특화거리 조성
 - 지역화폐(청주페이) 시스템 적극 활용
- 장기적 방안
 - 핵심산업 유치 및 육성 : 뿌리산업부터 미래차, 반도체, 이차전지 등
 -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로의 전환
도시농업, 로컬푸드, 사회적 농업 활성화 : 청주시 농업 자급율 상향
ESG 경영 기업, 기존 산업단지 RE100 산단 또는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 및 전환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영역 확대
자원순환형 탄소중립 전환마을 사업 추진
 - 농민소득, 청소년소득 등 단계적, 점진적 기본소득 도입
 - 사회안전망 확보 기본권 보장 시스템 구축
 - 먹거리 보장 : 꾸리찌바시의 가족창고 (식량공급 기금)
 - 주거권 보장 : 사회주택, 공동체주택,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도시공사, 개발이익 환수, 원도심 활용)
 - 이동권 보장 : 차없는 거리 운영(시클로비아), 시내버스 무상교통 시범운영 (청소년, 노인 등)
 - 제도적 장치 마련 (조례 제정 및 개정)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시대,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는?

발행일 2022. 7. 25.

발행처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연락처 043-267-0151 cbcitizen@hanmail.net

※본 자료는 충북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